



주간통일정세 2010-06(2010.02.01~02.0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0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北, 김정은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명령(2/1,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 김정은에 대한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모든 해외공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날 오전 제3국 주재북한 대사관의 한 소식통으로부터 “아침 독보(讀報)시간을 통해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지시문을 전달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힘.
 - 이어 “내년부터 김정은의 생일 1월8일을 ‘국가최대의 명절’로 지정할데 대한 지시문도 함께 받았으며, 이같은 지시문이 해외의 모든 북한 대사관에 전달됐다고 이 소식통이 말했다”고 덧붙임.

- 김정일, 집권후 1월중 방문활동 최다(2/3, 연합뉴스)
 - 지난 한달간 25회 공개활동, 군부대 8회 방문
 - 국방부측은 고위당정회의의 북한동향 보고에서 “1998년 김정일 체제 1기 출범 이후 1월중 방문활동이 최다 수준”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함.

■ 김정일동향

- 2/ 1 제630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2/1, 조선중앙통신)
 - 현철해, 리명수(인민군 대장) 등 군 지휘부 수행
- 2/ 2 베트남 공산당 창건 80돌 즈음 농 득 마임 총비서에게 축전(2/2, 중통)
 - 김중린(당 중앙위 비서), 이용철(청년동맹 1비서), 박도춘(자강도 당 책임비서) 등 참가
- 2/ 3 김정일, 함경남도 금야군 원평대흥수산사업소 현지지도(2/3, 중통; 중방)
 - 김경희(당 중앙위 부장), 이제강, 이재일, 전일춘, 한광상(당 중앙위 제1부부장들) 동행



■ 기타동향 (대내 정치)

- 유엔 사무차장-총장특보 9일 방북(2/1, 중앙일보)
-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제41차 전원회의(평양) 개최(2/2, 조선중앙방송)
 - 올해 공동시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년동맹 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
- 당의 '선군혁명영도업적' 지속 발전 강조(2/2, 노동신문 사설)
- 평화협정 체결 제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주장(2/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위원장 영도업적을 체득하기 위한 전국연구토론회(인민문화궁전) 진행(2/4, 조선중앙방송)
 - 최태복(당 중앙위 비서) 등 참가

나. 경제 관련

- 北 김정일, 인민들 강냉이밥 제일 가슴아파(2/1, 노동신문 정론)
 - 북한 노동당 기관지로 북한의 최고 권위지라 할 수 있는 노동신문이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걱정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잇따라 소개
 - 정론에서 김 위원장이 “아직 우리 인민들이 강냉이밥을 먹고 있는 것이 제일 가슴아프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에게 흰 쌀밥을 먹이고 밀가루로 만든 빵이랑 칼제비국(칼국수)을 마음껏 먹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수령님 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우리 인민을 강냉이밥을 모르는 인민으로 세상에 내세우자”고 말했다고 보도
- 北 식량난 심각...함남서 아사자 속출(2/2, 좋은벗들)
 -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은 2일 소식지에서 북한 노동당의 실태조사 자료를 인용, “북한 내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곳이 함경남도 단천시인데 올해 1월 초부터 26일까지 단천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가장 많이 나왔다”며 “단천시의 각 인민반마다 굶주림 때문에 일하러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망자도 하루에 1~2명씩 나왔다”고 전함.
 - 이처럼 상황이 심각하자 북한 노동당은 1월 중순께 주민생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이런 소동이 벌어지자) 단천시 시당이 중앙당에 직보를 올렸고 지난달 26일 중앙당에서 ‘단천시 농장들에 2호미로 저장해둔 벼 중에서 1천t을 배급으로 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단천시당은 1월 하순 당장 생계가 어려운 세대를 중심으로 배급을 서둘렀다”고 밝힘.
 - 소식지는 또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함남도 단천시에서 한국전쟁 참전자 등 일부 주민들이 시당 건물 앞에 모여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고 하는 지금 돈교환(화폐개혁) 이후 다 굶어죽게 생겼다”면서 거세



게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고 전함.

- 또 “지난달 20일 인민무력부에서는 후방총국 국장급 지휘관과 군 간부, 내각 일꾼이 참석한 가운데 군량미 확보 회의가 열렸다”면서 “이 회의의 주요 요지는 농사한 알곡을 다 털어서라도 군대 식량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임.

- 北, 화폐개혁 주도 노동당 간부 경질(2/2, 연합뉴스)
 - 북한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丹東)의 대북 무역상들은 2일 “화폐 개혁 이후 시장이 가동되지 않아 물가가 치솟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잇따르면서 화폐 개혁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화폐 개혁을 주도한 노동당 재정관리부장이 경질됐다는 얘기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파다하다”고 말함.
- 北, 지난해 대중 무역 7년 만에 감소(2/2, 니혼게이지아이신문)
 -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전년에 비해 4.0% 줄어들면서 7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세관총서의 무역통계를 인용, 지난해 북·중 간 무역액이 26억8천76만달러로 집계됐다고 이같이 보도
- 북한 동해서 ‘명태’ 대신 ‘멸치’(2/2, 조선신보)
 -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류 변화로 북한 동해에서 한류에서 사는 명태가 자취를 감추고 난류성 어종인 멸치가 많이 잡히는 것으로 전함.
 - 악화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홍수산기업을 소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어로체계의 과학화, 원양어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평안북도에 있는 북중기계연합기업소에 냉동설비 제작을 지시했으며 이곳 관계자들이 대홍수산기업을 찾아와 냉동설비와 설계도면을 보고 돌아갔다고 신문은 전함.
- 中→北 사치품수출 증가세…유엔제재 ‘무색’(2/4, 미국의 소리(VOA))
 - 유엔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사치품 수출은 줄지 않아 작년에 월평균 미화 1천1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보도
 - 특히 북한이 중국에서 들여온 사치품 중에는 철갑상어알과 바닷가재, 고급 자동차와 TV·컴퓨터·비디오, 양주·담배 등 기호품, 가죽 제품, 의류 등이 포함
- 北 노동당 조직정비…민심, 후계 ‘토끼잡기’(2/4, 연합뉴스)
 - 최근 북한 노동당이 주요 경제·대외 부서장을 잇따라 교체해 주목됨.
 - 당의 핵심 경제부서인 계획재정부, 재정경리부, 39호실의 책임자가 사실상 교체됨.



- 김책공대 대표단, 방미 마치고 귀국(2/4, 조선중앙통신)
 - 시러큐스대학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김책공업대학 대표단이 4일 귀국했다고 보도
 - “체류 기간 대표단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두 대학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확대하는 문제들을 토의했으며 일련의 합의를 이룩했다”고 전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음.
- 北 ‘계획경제 복원’ 공언…민심에 백기 드나(2/4, 연합뉴스)
 - 지난달 중순을 기해 주요 도시의 종합시장을 모두 폐쇄했던 북한 당국이 최근 시장거래를 다시 전면 허용해,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전 분위기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대북소식통은 이어 “시장뿐 아니라 문을 닫았던 외화상점들도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당국이 정한 환율과 실제 환율의 차이가 너무 커, 당국 환율대로 외화를 북한 돈으로 바꿔 외화상점 물건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전함.
-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 4건 보고(2/5, 미국의 소리(VOA))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 사례가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4건 보고됐다고 보도
 -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에르투그를 아파칸 위원장이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 “4건의 제재 결의 위반사례가 각각 지난해 8월14일, 10월12일, 12월23일, 12월28일자로 접수됐다”고 전함.
 - 아파칸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대북제재위가 “위반 사례 4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7인 전문가그룹’의 지원과 기술을 활용해 계속 조사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위반 사례를 보고한 나라들이 관련 정보를 비밀로 해줄 것을 요청해 구체적인 나라 이름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힘.
- 울산서 북한 모래수입 11개월만에 재개(2/5, 연합뉴스)
 - 북한 모래수입업체인 울산시 남구 매암동 수양광업주(대표 박성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울산항 일반부두에서 울산선적 태천1호(688t급.선장 김형식.54)가 북한 장전항 앞바다의 해저 모래를 수입하기 위해 출항함.

■ 기타동향 (대내 사회·문화)

- 北유별미(8)양이 제56회 슈만 국제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조 1등상과 특별상을 받았다고 보도(2/9, 조선중앙TV)
- 北 중앙식물원 국제친선식물관, 겨울베고니아와 엽자화품종의 식물 등 외국에서 보내온 선물식물 성과적으로栽培(2/10, 조선중앙통신)
- 北 고고학자들, 평양시 승호구역 리천리 일대에서 단군시기 집자리유적(남북길이 10.6~10.8m, 동서넓이 6.15~6.3m, 단검·창끝·도끼 등



발굴) 새로 발굴(2/10, 조선중앙통신)

- 北, 외국인 관광 두달만에 허용, RFA(2/10, 국민일보)
- 북한관광 전문인 중국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카커럴 대표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관광객들과 함께 주말인 오는 13일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해 평양과 개성, 묘향산 등을 여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탈북여성, 100만원에 인신매매, 북·중 국경경비원 중개, 아시히신문(2/12, 국민일보)
- 北선수단 입촌식 돌연 취소(2/12, 서울신문)

■ 기타동향 (대내 경제)

- 조총련, '90일 운동(2.10-5.10)을 힘차게 벌리기 위한 집행위원회를 각 지역본부들이 개별 진행(2/1, 조선신보)
- 미 의회조사국보고서, '북-경협자금 70억 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2/1, 한국경제)
- 4·15 기술혁신 돌격대 운동 개시 30돌 기념 중앙보고회 개최(2/3, 조선중앙통신)
 - 주체철 생산체계 완성, 공장·기업소의 CNC화 등의 기술혁신 성과 주장
 - 새 기록 창조를 위한 대정적 기술혁신운동을 벌려 전 단위에서 생산과 건설을 강조
- 북 화폐개혁 주역 박남기(노동당 계획재정부장) 전격 해임(2/3, 동아일보)
- 북 쌀값 10배로 폭등, 신의주서도 굶어죽어...(2/3 동아일보)
- 북 쌀값 폭등 아사자 속출, 좋은벗들(2/3, 한국일보)
- 북 시장 마비...단속원-주민 곳곳 총돌, 화폐개혁 후 극심한 혼란(2/3, 동아일보)
- 北보위부 엄경철, 일제 비밀수입 주도(2/3, 산케이신문)
-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대비약 속도로 '희천속도' 를 강조(2.4, 노동신문)
 - '희천속도'를 김정일이 강성대국으로 내달리는 대진군속도, 대비약 속도라고 명명하였으며, 김정일의 '불면불휴'의 강행군이 희천속도 창조의 근본원천임을 강조
- 농근맹 중앙위 제59차 전원회의 개최(2/5, 조선중앙방송)
 - 공동시설 관철 과업 토의 및 결정서 채택, 한경성(농근맹 중앙위원장) 등 참석
- 평양시 가로등 현대화 사업 본격 추진 보도(2/4, 조선신보)
 - 가로등 중앙조종체계 수립, 나트륨등·무전극방전등으로의 교체 등을 소개
- 화폐개혁 후 금지했던 북한 시장 다시 열림, 데일리NK(2/5, 중앙일보)
- 김정일 자금담당 김동운 해임설...후임 전일춘(2/5, 동아일보, 서울신문)



다. 군사 관련

■ 기타동향 (대내 군사)

- 미 국방부 보고서: 북, 10년 내 핵탄두 ICB(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전망(2/3, 중앙일보)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예술계, ‘사상교육용’ 외국고전 각색 활발(2/1, 조선중앙통신)
 -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음악당에서 당·정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이 시연됐다면서, ‘이고리 모이세예브 명칭 국립아카데미민속무용단’의 수석 지휘자인 아나톨리 니키토비치 구시가 지휘를 맡는 등 러시아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이 공연이 이뤄졌다고 보도
 - 이 작품이 “나라를 위해 유익한 일을 많이 해야 할 청년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파멸시키는 귀족층의 부패한 생활과 러시아 봉건사회의 불합리성을 폭로·비판하고 있다”고 소개
 - 외국 유명 고전을 주민사상교육 목적의 오페라 등으로 각색하는 북한 예술계의 ‘북한식’ 창작 활동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 활기를 띠고 있음.
- 북한에도 e북이...‘미래2.0’ 처음 확인(2/4, 자유북한방송)
 -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전자책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최근 외국의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했다면서 북한의 전자책 시스템 ‘전자서고 미래2.0’을 4일 연합뉴스에 공개
 - 이 시스템에는 정치, 문학 등 분야의 도서 1천500여권과 약 35만건의 정보가 수록돼 있는데, 북한 현대문학을 비롯해 상당 부분은 아직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로 추정
 - 왼쪽의 분류 항목에는 ‘주체사상’, ‘문학작품’, ‘조선노래집’, ‘글쓰기참조’, ‘문학대사전’, ‘조선말대사전’, ‘상식대사전’ 등이 나열돼 있는데 이를 클릭하면 다시 하위 목록이 펼쳐지는 방식
 - ‘미래2.0’은 수록된 책, 노래 가사, 사전 등의 내용을 각종 키워드로 검색하는 기능도 갖추.

■ 기타동향 (대내 사회·문화)

- 전국적인 원격 의료봉사체계 확립 보도(2/4,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영상협의체계 완성, 의료 정보DB화, 렌트겐 진단협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전반적 무상치료제에 의한 전국적인 먼거리 의료봉사의 실현 주장



마. 6자회담(북핵문제) 관련

■ 기타동향 (6자회담(북핵))

- 비핵화 첫 공정은 미국과의 신뢰구축, 마음놓고 발걸음 떼기 위한 선결조건임을 주장(2/2, 조선신보)
- 北, 시리아에 핵 관련 합금제조 기술 제공, 니혼게이자이신문(2/1, 연합뉴스)

2. 대외정세

● 北, 로버트 박 석방 결정...역류 42일만(2/5, 조선중앙통신)

- 작년 12월 25일 두만강을 건너 무단 입북한 재미교포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씨를 석방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 그러나 박씨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풀어줄지는 밝히지 않았다.
- “해당 기관에서 북부 국경을 통해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하였던 미국 공민 로버트 박을 역류하고 조사한 결과, 미국 공민은 조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다”면서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심심하게 뉘우친 점을 고려해 해당 기관에서 관대하게 용서하고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힘.

■ 기타동향 (대외)

- 김영남, 주북 폴란드 특명전권대사 ‘에드워드 뻬뜨쥐크’ 신임장 접수(2/1, 조선중앙통신)
-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냉정적 사고방식이라고 비난(2/1, 노동신문)
- 泰압류 북한 무기 최종목적지 확인안돼, AP통신(2/1, 연합뉴스)
- 伊, 북한으로 갈 음향·영상기기 압수(2/2, 연합뉴스)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비난(2/3, 노동신문)
- 북 외무성, 김정일 생일 즈음 주북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과 친선모임 개최(2/4, 조선중앙통신)

3. 대남정세

● 北, 동·서해 항행금지구역 추가설정(2/1,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31일 서해상 4곳과 동해상 1곳에 추가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짐.
- 군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31일 오전 7시부터 2일 오후 8시까지 서해 교동도 서방 5.8마일 해상과 평북 철산군, 평북 선천군



앞 서해상 4곳과 함남 금야군 앞 동해상 1곳 등 5곳에 각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

- 개성공단 실무접촉 결과 보도(임금인상 정당성 강조)(2/2, 조선중앙통신)
 - 근로자의 노임 인상과 토지임대료 문제를 선 협의할 것을 제기하였고, 남측은 3통문제의 선해결을 주장하였다고 보도
 - 임금인상은 공단사업 및 전망 관련 '관건적이며 초미의 문제'라고 강조
 - 향후 실무접촉에서 근로자 숙소건설, 임금인상에 대해 협의하고, 3통문제는 군사실무회담에서 다루기로 하였다고 보도
- 北 신문, 금강산관광재개, 북남관계 돌파구(2/3, 노동신문)
 - 금강산관광 사업이 재개되면 북남 관계를 개선하는 데서 돌파구가 열리게 된다"고 밝힘.
 - 노동신문은 '현실은 북남협력 활성화를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남조선 당국의 북남관계 개선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전함.
- 개성공단 임금 '200달러 이상' 요구(2/3, 우리민족끼리)
 - 이번 실무회담에 참석한 북측 대표는 3일 북한의 온라인매체 '우리민족끼리'와 인터뷰에서 "공업지구 근로자들의 현재 노임 수준은 하루 2.3달러 정도로, 사실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보잘것 없는 것"이라며 "지난 접촉에서 공업지구 근로자들의 신발, 의류 등을 제외한 생계비가 120달러 이상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근로자 노임이 적어도 200달러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또 다시 천명했다"고 말함.
- 남한 집권세력, 평화협정 체결 반대 비난(2/4, 노동신문 논평; 평방)
 - "북한의 성의있는 제안을 핵문제를 걸고 부정하는 것은 도리어 핵문제 해결에 장애를 조성하는 근시안적인 망동"이라면서 비난
 - 남한 집권세력의 평화협정 반대 목적은 "핵문제 해결이 아니라 의세와 야합하여 북을 무력으로 침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
 - 북침전쟁 도발책동, 선제타격 발언, 급변사태 대비 등을 언급

■ 기타동향 (대남)

-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폭언은 북침전쟁정책의 반영이라고 주장(2/1, 노동신문)
- 남북정상회담, 남 하반기-북은 상반기 선호, 국군포로·납북자 의제화 이견(2/1, 국민일보)
- 남북정상회담, D-day 저울질...장소는 북·제3국 유력(2/1, 서울경제)
-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보안법과 남한당국의 반통일 대



- 결정책을 비난(2/2, 노동신문 사설)
- 북 '선임금인상' 논의 고집, 개성공단 회담 합의 실패(2/2, 국민일보)
- 3통은 군사실무 회담서...숙소 등은 추가 협의키로-
- 북, 서해4곳·동해1곳 항행금지구역 추가 선포(2/2, 동아일보)
- 6·15, 10·4선언에 기초하여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를 발전 시켜야 한다고 주장(2/3, 노동신문)
- 북, 백령·대청도 해상 2곳 또 사격구역 설정(2/4, 한국일보)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전방위 평화공세..한반도정세 급변하나>(종합)(2/7)

- 한반도 정세에 급격한 지각변동의 기운이 감돌고 있음. 진원지는 평양임. 2월에 접어들기 무섭게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전방위적 평화공세를 전개하면서 장기교착 국면에 놓인 북핵, 6자회담과 남북 관계에 중대한 물꼬가 트일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북핵 협상을 고리로 안정적 체제구축과 경제난 타개를 도모하려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해지고 있음.
- 우선 주목할 이벤트는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임. 6일부터 4일간 이어지는 이번 방북은 당(黨) 대 당(黨) 연례방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유동성 높은 현 북핵 국면에서 6자회담 재개의 중요한 돌파구를 낼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 정부의 한 소식통은 7일 “중국은 작년 하반기 이후 다이빙귀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원자바오 총리를 평양에 보내 대화국면의 상승사이클을 고조시켜왔지만 작년 12월 북·미대화 이후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번 방북은 대화사이클에 다시 시동을 걸어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음. 이 소식통은 이어 “왕 부장이 다녀오면 중국은 다시 미국에 공을 넘겨 다시 한번 움직여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음. 이에 따라 지난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 이후 성사되지 못했던 북·미 고위급 대화가 한차례 더 개최될 가능성이 주목됨.
- 특히 이번 방북이 북한 측 초청으로 이뤄진 점이 중요함. 이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포함한 전반적 한반도 정세에 대해 입장정리가 마무리됐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대규모 추가 경제지원이라는 ‘설 선물’을 약속하고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공식 선언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음. 왕 부장은 8일 김 위원장을 면담하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 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임.
- 유엔 대북특사의 방북도 북한 대외 평화공세의 중요한 갈래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친서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부담당 사무차장은 9일부터 12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예정임. 이는 2005년 이후 중단됐던 유엔과 북한간 고위급 대화가 복원된다는 의미와 함께 작년 내내 유엔의 제재조치에 강력히 반발해온 북한



- 이 전술적 태도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 8일 열리는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은 남측을 향한 평화공세의 일환임.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이후 약 1년7개월만에 관광 재개문제가 남북간 대화테이블에 오르는 것임. 북한이 이처럼 전방위적 평화공세에 올인하는 것은 고도의 전략적 계산을 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무엇보다도 북한 내부의 극도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려는 행보라는 풀이가 나옴. 외부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39호실(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관리처) 금고까지 바닥이 났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경제난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관측임. 특히 북한 경제는 지난해 11월말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후 제대로 물자공급이 뒤따르지 않아 다시 인플레이가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음. 이에 따라 북한으로서는 물자공급 통로인 중국과 한국을 상대로 유화공세를 펼치고 있음. 왕자루이 방북초청이나 개성·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은 결국 물자와 ‘달러박스’를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풀이임. 북한이 유엔 인사들을 초청하면서까지 제재완화의 분위기 조성에도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임. 달러 주수입원인 무기 수출이 차단되면서 북한의 ‘달러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임. 이에 따라 북한은 유엔 특사를 상대로 경제문제와 관련한 협력 프로그램을 중점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는 내부 권력승계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경제난이 심화되고 내부 동요조짐이 커질 경우 2012년을 목표로 하는 강성대국 건설은 물론 안정적인 권력이양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 정부의 한 소식통은 “한으로서는 6자회담 복귀가 늦어지는데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시간과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뉘가를 대외적으로 내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깜짝발표’ 가능성을 시사했음.
 - 6자회담의 경우 평화협정과 제재완화 이슈를 둘러싸고 북·미간 평행선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이 중재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됨. 또 정상회담은 원칙론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다 관련국간 조율이라는 무형의 장애물이 있어 6자회담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속도를 내기가 여의치 않다는 지적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르면 이달말께로 예상되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6자회담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의 전반적 흐름에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카드가 될 것이라는 외교가의 지배적인 관측임. 왕 부장의 이번 방북은 북한으로부터 6자회담 복귀 선언을 받아내기 보다는 김 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초청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이런 맥락에서 나옴. 한 고위소식통은 “중국은 이미 김 위원장의 방북을 초청해놓았고, 택일만 남은 상황”이라면서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문제가 중점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정상회담-6자회담 직접 연계 안돼”(2/4)

- 정부는 4일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선후관계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은 원칙에 맞고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개최될 수 있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6자회담은 북핵 해결을 위해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는 측면”이라며 “정상회담과 6자회담을 직접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후 관계로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6자회담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고, 반대로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비핵화 논의가 진전된다면 그것이 남북 정상회담을 진전시키는데 좋은 여건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선(先) 정상회담, 후(後) 6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캠벨 차관보가 전날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바로 다음에 와야 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언급한데 대해 “그것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둘러싼 한·미간 시각차 여부에 대해 “양자간에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지 않다”며 “캠벨 차관보의 방향을 계기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긴밀한 공조에 대해 상호 평가했으며 앞으로 긴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반환 문제와 관련,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양국의 기본입장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저작권 전환의 시기를 재조정하자는 등의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캠벨 차관보가 한국내 일각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자신의 발언이 한국이 언론에 의해 확대 보도된데 대해 크게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나. 미·북 관계

● 클린턴 “대북 개입정책이 제재 견인”(2/7)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7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대해 개입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나마 중국, 러시아가 동의한 가운데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채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CNN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이라는 시사 대담프로그램에 출연, 핵야망을 갖고 있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개입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민 손을 북한이 아직까지 잡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입정책은 작년 한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복귀)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진지한 모습을 보이면 협력하겠다고 제



안했으나, 북한은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이 북한을 모욕하는 데만 혈안돼 있는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전을 모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한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됐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제재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개입과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과 더디지만 일관된 외교활동 덕분에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란의 위협을 알게 됐다”며 “따라서 앞으로 이란이 개입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계 각국이 더욱 강력한 조치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셈”이라고 말했다.

● 로버트 박, 미국 도착해 가족 재회(종합2보)(2/7)

-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 43일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박(28)씨가 6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도착해 가족과 상봉했다. 박씨는 중국 베이징(北京)발 민간 항공기편으로 이날 저녁 LA국제공항(LAX)에 도착해 공항 내 별도 공간에서 부모와 형을 만났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박씨 가족은 공항을 떠나기에 앞서 잠시 취재진에게 박씨가 양호한 상태라고 전했으나 다소 야위고 창백해 보이는 박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씨의 형 폴은 “동생을 안아보니 특별히 이상한 데는 없는 것 같다”면서 체중이 좀 빠져 보이지만 건강은 양호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씨는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중국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주중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5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종교의 자유를 호소하겠다고 스스로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됐었다.

● “로버트 박 석방 결정”<조선중앙통신>(2보)(2/5)

- 북한이 작년 12월 24일 두만강을 건너 무단 입북한 재미교포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씨를 석방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해당 기관에서 북부 국경을 통해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하였던 미국 공민 로버트 박을 억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조사 결과 미국 공민은 조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또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심심하게 뉘우친 점을 고려해 해당 기관에서는 관대하게 용서하고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美, 北 급변사태 대비훈련 필요성 제기”(2/5)

-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5일 “미군 관계자들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실제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최근 공식, 비공식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안다”면서 “국방부와 합참에서 이런 제의를 수용할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고위 관계들은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 이후 이런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당국은 키리졸브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처럼 별도의 대규모 훈련을 하기보다는 기존 훈련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포함하는 방안, 북한으로 명시되지 않는 가상 인접국의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형태로 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현재 한미 군당국이 북한의 다양한 우발사태에 대응해 토론 형식의 토의는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실제 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美 “北, 테러지원국 여부 계속 평가”(2/5)

- 미국 국무부는 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전날 의회에 통보한 것과 관련, 북한의 행동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하기 위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신중히 계속 평가해 보겠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신중한 재검토 끝에 (의회에 제출된 관련) 보고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되기 위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집중 검토했고, 그들이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평가했다”면서 “하지만 재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그러나 이는 우리가 앞으로 신중히 계속 평가해 나갈 문제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언급, 향후 북한의 활동을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 측면에서 계속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관련된 활동들 및 위험스러운 기술들을 확산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활동을 둘러싼 증거들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만일 (재지정을 위한) 법적 기준에 도달하면 다른 판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바마 “北 테러지원국 해제 유지”(종합)(2/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제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북한이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국무부도 올해 발표할 연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계속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서한과 함께 북한과 관련한 기밀보고서를 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작업이 급물살을 탔던 지난 2008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했음.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봄 제2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 하면서 한반도의 위기지수를 끌어올리자, 공화당 샘 브라운백 의원 등 일부 대북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거세게 제기됐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이런 공화당 일각의 압박을 받아 여러 차례 언론인터뷰를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릴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하지만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고리를 걸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테러지원국 명단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워싱턴 싱크탱크 사이에서 제기돼 왔음.

● 김책공대 대표단, 방미 마치고 귀국(2/4)

- 시러큐스대학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김책공업대학 대표단이 4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체류 기간 대표단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두 대학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확대하는 문제들을 토의했으며 일련의 합의를 이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통신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홍서현 총장 등 김책공대 대표단은 지난달 24일 미국에 도착해 시러큐스 대학에서 첨단 정보기술 등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를 가진 뒤 29일 뉴욕에서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사학과 교수,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도널드 그레그 명예회장 등과 면담을 가졌으며 영화 ‘아바타’를 관람하기도 했음. 북한 최고의 이공계 대학인 김책공대는 시러큐스대학과 정보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수년간 교류를 해왔음.

● 美 DIA국장 “北 가까운장래에 핵무기제거 안할것”(2/3)

- 로널드 버저스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 능력을 제거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버저스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 DIA가 예측하는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열거하면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전망했음. 그는 “북한은 계속해서 가까운 장래(foreseeable future)에 핵무기 능력을 제거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들이 그들의 재래식 군을 괴롭히고 있는 병참 부족과 낡은 (군사)장비, 부족한 훈련을 메워주는 한편 전략적 억지력과 레버리지(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분석했음.

● 美 “김정일, 北 핵보유국 지위 모색”(종합)(2/3)

-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일 “북한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블레어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에서 “우리는 북한이 (그동안) 2개의 핵장치(two nuclear devices)를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그렇게 할(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레어 국장은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북한이 2006년 10.3 합의에서 핵물질, 기술, 노하우의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지만, 핵기술 수출을 재개할 가능성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또 블레어 국장은 “현 시점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잇단 실험을 통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종전보다 유리해진 협상포지션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남한과의 재래식 군사력 차이가 너무 현격히 벌어진데다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전망이 희박하다는 판단에서 그들 정권을 겨냥한 외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핵프로그램 개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물론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재래식 전력의 취약함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는 김정일과 그의 후계자들이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음.
- 블레어 국장은 “북한군의 능력은 낙후된 무기체계, 군사전투 시스템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 병사들의 악화된 신체 상태, 줄어든 훈련, 사회 인프라 지원에 차출된 군병력 등의 문제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융통성 없는 리더십, 부패, 저하된 사기, 낙후된 무기, 취약한 병참 시스템, 지휘통제 체제의 문제점 등도 북한군의 능력과 전투 태세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란, 파키스탄을 포함한 수 개국에 탄도미사일 및 그에 관련된 물자를 수출하고, 시리아의 핵원자로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2007년 발각된 것은 북한의 확산활동의 범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지난해 9월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이 완성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런 발표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추구해온 우라늄농축 능력은 무기(제조)를 위한 것이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국무부, 대북예산 250만불 책정(2/3)

- 미국 국무부는 2011회계연도 예산에 북한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250만달러를 책정해 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전날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경제적지원펀드(ESF) 항목에 북한에 대한 이 같은 지원 예산을 책정해 뒀음. 이는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예산으로, 올 회계연도에 책정된 350만



달러보다 100만달러 적은 것임. 국무부는 이외에 2011회계연도 예산에 북한과 관련한 별도의 예산은 책정해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앞서 지난해 미 의회는 2010회계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폐기 거부에 따라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대북 에너지 지원용으로 책정됐던 예산 등 9천500만달러를 삭감한 바 있음.

● 멀린 “北, 대륙간탄도탄 기술 계속 추구”(2/3)

-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2일 “북한은 국제법과 조약을 어긴 채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추구, 핵무기 개발, 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멀린 합참의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북한의 전제주의적인 정권은 아시아에서 예측불가능한 나라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멀린 합참의장은 또 “북한은 우리의 동맹인 한국에 대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역시 동맹인 일본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국방부가 1일 펴낸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보고서는 북한이 조만간 대포동 2호 미사일 실험에 성공하고, 10년 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 캠벨 “北, 6자회담 복귀가 우선”(종합)(2/3)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바로 다음에 와야 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음. 캠벨 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와 회담을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다른 사안으로 인해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집중을 흐트러 뜨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2005년과 2007년의 합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면서 “남북간 관계 개선이 이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한·미는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캠벨 차관보는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체제 및 관계정상화 논의를 북핵 포기를 위한 대가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단계적이며, 북한이 다음에 할 조치는 6자회담으로 돌아와 예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그런 맥락 안에서 정치적, 전략적, 경제적, 재정적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음. 그는 한국의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 참여 문제에 언급, “BMD의 다음 조치에 대해 양국 군 당국 간 협의가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캠벨 차관보는 또 북한에 억류된 로버트 박의 근황과 관련, “평양으로 이동한 것 같다”며 “평양에 있는 (다른 나라의) 대사관을 통해 영사접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는 최근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두 번째 미국 시민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를 수집하고 있



다”면서 “이에 대한 영사접근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캠벨 차관 보는 이 차관보와 회담을 마친 뒤 이해민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차례로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 저작권 전환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음.

● 미국방차관 “미사일방어 초점은 北, 이란”(2/2)

- 미셸 플러노이 미국 국방정책 담당 차관은 1일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 노력은 북한과 이란에 의한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는데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플러노이 차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와 관련해 행한 배경 설명에서 “(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국의 의도는 러시아 혹은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플러노이 차관은 “급속히 확대되는 역내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미국은 미사일 지역 방어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우리는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방어능력의 개발과 실전배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왔다”고 강조했다.
- 또 플러노이 차관은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강력하고도 협력적인 토대 위에서, 또 적절한 고통분담을 통해 역내 역지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문제에 언급, “WMD로 무장한 국가의 불안정 또는 붕괴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사안”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면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을 주는 지구적 위기로 순식간에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플러노이 차관은 WMD 무장국가로 북한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등의 급변사태 등에 대해 미국 정부가 상당히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했음.

● “오바마, 북미 평화협정 기회 잡아야”<FP>(2/2)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금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그가 대통령선거기간 세계를 고무시켰던 변화와 희망의 이미지를 다시 보여줘야 한다고 한 미국 교수가 주장했다. 앤소니 디필리포 링컨대 사회학 교수는 1일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아직 아무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디필리포 교수는 “한국전쟁을 영원히 종식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도 주장해온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쉽고, 오바마 대통령을 전임 대통령과 차별화시키는 미국 외교정책의 완전한 새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우선으로 주장하는 잘못된 접근을 해왔으며 실제 비핵화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응분의 대상물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남북한과 미국, 중



국이 우선 평화협정에 서명한 후 북한이 적절한 시한(12개월) 내에 비핵화를 달성하지 않으면 평화협정을 무효화시키면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의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을 비핵화하는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행동 대 행동’을 요구하는 북한의 기준에도 맞는 ‘윈-윈 외교’라고 디필리포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북미평화협정 체결은 “미국이 핵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문제에 진전을 가져올 기회”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美, ‘불량국가’ 전략 바꿔야” <뉴스위크> (2/1)

- “불량 국가(rogue state)의 시대는 끝났 미국이며, 새 전략을 짜라”. ‘불량 국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국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흔히 사용됐음. 그러나 세계 권력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들 ‘불량 국가’를 제재해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전략은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넷판이 지난달 29일 보도했음. 뉴스위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한 역대 미국 정부가 이란이나 수단, 북한, 베네수엘라 등 전통적인 ‘불량 국가’에 제재를 근간으로 한 접근 방식을 취했지만 결과는 별 소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미얀마와 북한 사이에는 군수물자 교역이 이뤄지고 있음. 이란은 시리아와 관계를 공고히 다지고 있고, 베네수엘라 역시 쿠바를 드러내 놓고 지지하는 등 서방의 제재가 외려 이들 ‘불량국가’ 간 연대를 공고하게 했다는 분석임. 게다가 이 같은 제재는 대상국에 전혀 생산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옴. 경제·외교상의 제재가 결국 해당국 정권의 입지만 다져줬을 뿐, 사회경제적 하부구조나 대외무역 발전에는 오히려 해가 돼 국민에게는 정권의 압제와 함께 ‘이중 제재’가 됐다고 뉴스위크는 지적했다.
- 이런 가운데 브라질과 인도, 터키, 러시아, 중국 등 국제 정치판의 신흥국은 이들 국가를 존중하면서 각 분야에 꾸준히 투자를 늘리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음. ‘불량국’과 대척점으로서 ‘국제 사회’라는 표현이 무색해진 상황임. 결국 ‘불량국’ 제재를 주 전략으로 삼은 미국 등 서방세력은 애초 의도했던 목표는 거의 달성하지 못한 채 고작 ‘죽 썬 개 준’ 꼴이 됐다는 지적임. 오늘날 각국이 외교 관계에서 ‘후견인’보다는 ‘동반자’를 원하지만 미국은 이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반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이들 ‘불량국’에 든든한 지원군이자 정치·경제적 모델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임.
- 뉴스위크는 미국에 필요한 새 전략으로 “불량국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제재를 완전히 거두고 학생 교환과 여행을 자유화하는 등 획기적인 방향 수정이 이뤄진다면 ‘불량국’ 국민은 물론 신흥국으로부터도 지지를 얻고, 해당 ‘불량국’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뜻임. 이 같은 급격한 기조 변화는 미국 내에서 정파를 막론하고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



이 있다고 뉴스위크는 내다봤음. 보수세력은 이를 ‘불량국’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진보진영은 해당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탄압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보기 때문이라는 얘기임.

- 뉴스위크는 그러나 ‘불량국’을 고립시키는 외교 기조가 실패했음은 명백한 진실이라면서, 이 같은 기조 변화가 단시간 안에 해당국 정권의 태도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이들 국가를 상대로 안보와 인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 중·북 관계

● 방북 中대표단, 노동당 국제부와 회담(종합)(2/7)

- 왕자루이(王家瑞) 부장이 이끄는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이 방북 이틀째인 7일 북한 노동당 국제부 대표단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김영일 부장을 비롯한 국제부 일꾼들이, 중국 측에서는 왕 부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참석했음. 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당 활동 정형(상황)을 통보하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문제와 호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선중앙TV는 이날 왕 부장 일행이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다고 밝혔음. 왕 부장은 전날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 북한 노동당 국제부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으며 오는 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평양에 머무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 “中 왕자루이 내주 전격 방북”(종합2보)(2/5)

- 중국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내주 중 평양을 전격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5일 “왕 부장이 내주 중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매년 연초에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간의 정례적 교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6자회담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의 이번 방북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회담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함으로써 사실상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짐. 특히 왕 부장이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하고, 김 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를 천명할 가능성이 주목됨.
- 왕 부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직접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앞서 2004년, 2005년, 2008년에 이어 작년 평양을 방문했으며, 매년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후 주석의 친서 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 그의 방북은 장기 교착에 빠진 6자회담을 복원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외교가에서는 왕 부장의 방북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의미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 김 위원장은 당초 지난달 하순 베이징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철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이날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 부장이 과거 수차례 연초에 방북한 적이 있는 만큼 방북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식통은 “만일 왕 부장이 방북할 경우 북핵 문제와 대외업무에 관련된 북측의 고위인사들을 두루 접촉하게 될 것”이라며 “아무래도 최근 현안인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고 김 위원장의 방중을 포함한 양국간 고위급 교류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中→北 사치품수출 증가세..유엔제재 ‘무색’(2/4)

- 유엔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사치품 수출은 줄지 않아 작년에 월평균 미화 1천1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특히 북한이 중국에서 들여온 사치품 중에는 철갑상어알과 바닷가재, 고급 자동차와 TV·컴퓨터·비디오, 양주·담배 등 기호품, 가죽제품, 의류 등이 포함돼 있었음. 이 방송은 최근 미국 의회조사국이 발표한 ‘중국과 북한 관계’ 보고서를 인용,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가 채택된 2006년 10월부터 작년 말까지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제재는 일부 이행하고 있지만, 이중적 목적의 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에는 소극적”이라며 “중국의 대북 사치품 수출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를 채택, 북한에 대한 무기나 사치품 수출을 금지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지난해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월 1억~2억달러 규모였는데 이 가운데 사치품이 월평균 1천100만 달러를 차지했다”면서 “그 중에는 철갑상어알과 바닷가재 등 고급 식료품, 양주, 담배, 가죽제품, 고급 의류, 컴퓨터, 비디오, 텔레비전, 자동차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특히 매년 12월이 되면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늘어났는데, 2008년 12월의 경우 사치품 수입 총액이 5천만 달러를 넘었고, 이중 가죽제품이 1천6백만 달러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덕 낸토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노동당이나 군부의 핵심 요원들에게 새해 선물을 주려고 연말에 사치품을 대량 수입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중국이 대북 사치품 수출을 통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북한의 체제가 안정돼 탈북자들이 자국으로 몰려들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北, 지난해 대중 무역 7년 만에 감소”(2/2)

-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전년에 비해 4.0% 줄어들면서 7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은 2일



중국세관총서의 무역통계를 인용, 지난해 북·중 간 무역액이 26억8천76만달러로 집계됐으며 이같이 보도했음.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 실험에 따른 관계 악화, 11월 말 북한의 화폐개혁에 따른 혼란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화폐개혁 실시 직후인 12월 북·중 간 무역액은 20.8%나 감소했음. 남북 간 지난해 무역액 역시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전년에 비해 8.5% 감소한 16억6천608만달러(관세청 자료)로 나타난 만큼 북한의 전체 무역 규모도 감소하면서 경제난이 가중됐을 것으로 이 신문은 관측했음.

- 지난해 중국의 대북 수출은 전년 대비 7.1% 감소한 18억8천774만달러, 수입은 역시 4.3% 감소한 7억9천302만달러였음. 12월의 경우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7%, 수입은 34%나 감소하는 등 화폐개혁으로 인한 북한 경제 혼란 및 환율 불안정 등이 무역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됐음. 신문은 “화폐개혁에 이어 올 1월부터는 북한 내에서 달러나 유로화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추가 조치가 시행되면서 북·중 무역의 거점인 중국 단둥(丹東)과 북한 신의주를 통과하는 화물차량도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 기타

● 유엔 대북특사 “北과 모든 이슈 논의”(종합)(2/6)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특사로 9~12일 방북하는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부담당 사무차장은 6일 “북한 측과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파스코 특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림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도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음. 그는 ‘반기문 총장의 친서를 소지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기다려 보자”며 즉답을 피했고 앞서 방북 일정에 대한 질문에도 “나중에 얘기하자”고만 말했음. 파스코 특사는 “위 본부장과 한국과 유엔 간 여러 이슈에 대해 좋은 협의를 했다”면서 “이번 방북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음.
- 그는 위 본부장과 면담에 이어 천영우 제2차관과 오찬을 함께 하고 이날 오후 5시30분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유명환 장관을 예방,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관련 현안과 한국과 유엔의 협력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파스코 특사는 8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면서 박수길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회장, 유엔 총회 의장을 지낸 한승수 전 총리 등과 만난 뒤 중국 베이징(北京)을 거쳐 9일 항공편으로 북한에 들어갈 예정임. 파스코 특사는 방북 기간 박의춘 외무상을 비롯한 북측 고위 인사들과 만나 북핵 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스코 특사 일행에는 김원수 유엔사무총장 비서



실 차장과 유엔 사무국 실무직원 2명이 동행하며, 12일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나온 뒤 13일 서울에 다시 들렀다가 14일 뉴욕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 泰, 내주 北 무기 운송승무원 기소여부 결정(2/5)

- 태국 법무부는 북한산 무기를 제3국으로 운송하려다 억류된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 승무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오는 1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태국 현지 신문인 더 네이션이 5일 보도했음. 이들 승무원은 지난해 12월 북한산 무기 40t을 운송하다 태국 당국에 억류됐으며 1명은 벨라루스인이고 4명은 카자흐스탄 출신임. 줄라싱 와산타싱 태국 법무장관은 “11일까지 승무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추방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있어 만약 승무원들을 석방하게 되더라도 추방이 아닌 본국 송환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줄라싱 장관은 승무원들을 본국으로 송환해달라는 정부측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태국 외무부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정부측이 공식적으로 송환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음. 앞서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정부측이 자국 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무원들의 본국 송환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음.

● “北 붕괴 전망 아직은 이르다” <더타임스> (2/5)

- ‘식량난, 물가상승, 보위부원에 대한 공격, 경제관리 실패에 대한 분노’ 등과 같은 북한에 대한 보도를 액면 그대로 보면 정권교체의 조짐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이른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음.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4일 ‘종말이 가깝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인도네시아가 1997년 이런 일을 겪었을 때 32년 집권했던 수하르토 대통령은 다음해 권력에서 물러났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붕괴를 짐치기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음.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한국의 웹사이트인 데일리NK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북한 주민들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기도 하고 작년 11월 화폐개혁에 대한 보도를 포함해 가장 처음 뉴스를 보도하는 놀라운 기록을 갖고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음.
- 그러나 보수언론과 마찬가지로 데일리NK도 북한의 변화를 원하는 지지자들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뛰어난 정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편중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임. 또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화폐개혁으로 인해 분노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돼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음.
- 1990년대 후반에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지만 당시에 도 북한 정권은 존립에 심각한 도전을 받지 않았음.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 정권의 생존에 굶주림이나 사회불안 보다는 김정일의 건강



을 더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지만 그는 2008년 심한 뇌졸중 충격에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더 타임스는 끝으로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은 수없이 많았다”면서 “확실한 증거가 없는한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결론지었음.

●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 4건 보고” <VOA>(2/5)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 사례가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4건 보고됐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5일 보도했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는 작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에, 1718호는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직후에 각각 채택됐음. 이 방송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에르투그를 아파칸 위원장이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 “4건의 제재 결의 위반사례가 각각 지난해 8월14일, 10월12일, 12월23일, 12월28일자로 접수됐다”고 전했다.
- 아파칸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대북제재위가 “위반 사례 4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7인 전문가그룹’의 지원과 기술을 활용해 계속 조사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위반 사례를 보고한 나라들이 관련 정보를 비밀로 해줄 것을 요청해 구체적인 나라 이름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그는 이어 “대북 제재 이행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 산하 ‘7인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각국의 구체적 조치들에 관한 보고서를 받았다”면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제재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 “한 나라가 지난해 12월 4일자로 대북 결의 1718호의 사치품 금수 조항 이행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47개국인데,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27개국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가 한국, 일본, 중국 등 9개국이며 그밖에 미주 대륙이 미국 등 7개국, 오세아니아가 호주, 뉴질랜드 2개국임.
-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터키와 레바논 2개국만 이행보고서를 냈고, 아프리카에서는 단 한 나라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산국가로는 중국, 베트남, 쿠바, 라오스 4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했음. 안보리는 지난해 6월12일 1874호 채택 당시 각국이 채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음.

● 北무기선적 선박 지난해 3척 운항차단(2/4)

- 북한제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선박이 지난해 총 3척이 운항차단됐던 것으로 3일 밝혀졌음.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업데이트한 ‘북한: 테러지원국 리스트 삭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이란으로 향하던 북한제 무기가 수차례 차단됐다”면서 “3척의 선박이 (이란행



- 운항이) 가로막혔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이들 선박은 북한제 무기를 싣고 있었으며, 서방 정보당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자는 이들 무기가 헤즈볼라와 하마스로 향하던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해의 경우 이란으로 향하다가 아랍에미리트(UAE) 당국에 의해 7월 억류된 화물선 ‘ANL-오스트레일리아’호에서 상당량의 북한제 무기가 발견된 사실 외에는 북한제 무기를 실은 선박의 운항차단사례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음. 보고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억류된 수송기에서 발견된 35t에 달하는 북한제 무기와 관련, “이들 대부분의 무기가 이슬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로 향하던 것으로 서방 정보소식통들이 결론을 내렸다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신문들이 전했다”고 소개했음.
 - 보고서는 “이란으로 향하던 압류된 북한제 무기는 헤즈볼라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보여주는 직접적 증거로 여겨진다”고 의혹을 제기했음. 이와 관련, 보고서는 “몇몇 다른 소식통들에게서 나오는 얘기는 북한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스리랑카의 반군세력인 타밀호랑이에 무기를 공급했으며, 훈련도 제공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헤즈볼라와 타밀호랑이는 미국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국제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들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의 적절성에 우회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음.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지난해에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가졌다는 많은 보도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 대북지원 모델 모색 국제토론회 열려(종합)(2/4)

- 국제사회의 바람직한 대북지원 모델을 모색하는 제1회 북한국제도너컨퍼런스가 4일 미국 민주주의재단(NED)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동주최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렸음. 칼 거쉬먼 NED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화폐개혁 등을 거론하면서 “국가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북한 정권의 노력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시장은 빈곤한 사람들의 대체기제여서 시장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북한의 비극적인 상황을 악화시키고 엘리트층과 주민들의 골을 깊게 할뿐”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NED 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대북지원 프로그램과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의 통합 ▲남한 내 탈북자의 대우 등을 꼽으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북한의 개발과 민주주의를 도모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을 구제하는 것이 전 세계의 공통 관심사라는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은 개회사에서 “남북간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 현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은 부족한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북한이 세계



경제와 국제사회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현실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에게 개방 과정을 빠르게 진전시켜야 할 필요에 대해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체제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한국전쟁 60주년과 6.15공동선언 10주년인 올해는 남북관계에서 새 전기를 마련할 때”라며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남북한이 서로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선언적으로 채택할 것이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라며 “체제 보장에 대한 북한의 신뢰가 있을 때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도 이날 대독된 축사에서 “북한의 인권 존중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는데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는 “1970년대 한국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일할 때 한국인들이 외부의 도움 속에서 주도적으로 개발, 인권,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미 정부는 북한도 이렇게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올해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300만달러를 배정하고, 특히 북한에 외부세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개막 행사에 이어 ‘현대화와 민주주의, 북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 ‘제2회의-북한 인권, 탈북자, 언론 문제: 교훈과 미래 방향,’ ‘제3회의-경제 개발, 참여 그리고 시장 개혁’ 등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음.
- 회의에서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 현대화 연구팀, 박형중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북한변화를 위한 학술적인 내용을 발표했으며 ‘국경 없는 기자회견,’ ‘휴먼라이츠워치,’ 북한인권시민연합, 자유북한방송, 백두한라회 등 대북인권단체들이 참여해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음.

● 泰 “北 무기 운송 승무원 본국 송환될 수도”(2/3)

- 미사일 부품 등 무기류를 북한에서 제3국으로 운송하려다 태국에서 붙잡힌 항공기의 승무원들이 재판에 부쳐지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수첩 타웅수반 태국 부총리가 3일 밝혔다. 수첩 부총리는 이날 태국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국적인 승무원 5명을 해당국의 요청대로 본국으로 추방하는 데 반대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태국 법무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태국의 안보와 이들 국가(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원만한 관계를 위해 그런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태국의 최대 이익을 구할 뿐 누구와도 문제를 일으키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압수한 무기류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유엔(UN)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태국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압수된 무기류에는 로켓과 신관, 로켓 발사장치, 로켓 추진 수류탄(RPG)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무기의 종착지는 이란으로 조사됐음. 익명을 요구한 태국 고위 안보 관리자는 지난해 12월 이 무기류가 이란으로 향하는 중이었으며 그중에는 대포동 2호 미사일 부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란, 泰역류 北 무기 관련성 부인(2/3)

- 이란은 작년 12월 북한산 무기 40여t을 운송하다 태국에 억류된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태국 정부의 주장을 부인했음. 라민 메흐만파라스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일 기자들에게 “화물기와 이란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도 없다”면서 이란은 로켓, 탱크, 제트 전투기, 미사일 등 자체 군수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기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음. 태국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억류된 화물기의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란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밝혔음. 한편 제네바를 방문 중인 카시트 피롬야 태국 외무장관은 2일 태국 당국에 억류돼 있는 화물기 승무원들을 석방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카시트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태국 내각이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출신의 이들 승무원을 석방할 것을 지난주 검찰에 권고했다면서 승무원들이 본국에서 법적 처리를 받게 될 것 같다고 말했음. 이와 관련, 파니탄 와타나야콘 태국 정부 대변인은 태국 정부는 검찰에 승무원들의 석방을 명령할 수 없지만 이번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검찰에 승무원들의 석방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 伊, 북한으로 갈 음향-영상기기 압수(2/2)

- 이탈리아에서 북한으로 보낼 고급 음향기기와 영상 기기들이 반출 직전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 세관에서 압수됐다고 2일 이탈리아의 인터넷 신문 리베로가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압수된 물품들은 공연장에서 쓸 음향과 영상 재생을 위한 전자 기계들이며, 북한의 한 기업으로 수출될 것으로 신고서에 기재돼 있었음. 당국은 세관 정보 시스템에 나타난 이 같은 정보와 유럽연합(EU)이 지난해 말 공포한 대북 금수조치에 따라 화물을 압수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마잉주 “대만, ‘수표외교’ 포기”(2/2)

-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돈을 주고 외교 관계를 맺는 ‘수표 외교’를 포기했다고 말했음. 마 총통은 1일 타이베이(臺北)에서 개최된 국제민주연맹(IDU)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 4년 전 호주를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외교 우방을 끌어들이는 대만과 중국 간의 고질적 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만 신문들이 2일 보도했음. 그는 호



주 방문 당시 “내가 어디를 가도 언론, 싱크탱크, 의회는 대만과 중국 간의 악성 싸움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았고 호주 친구들은 이를 수표 외교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마 총통은 “나는 유연한 외교를 주창해 왔으며 ‘외교 휴전’이 그 주요한 특징들 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국제무대에서 악명만 가져다주는 제로섬 게임을 양안이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 국제민주연맹은 1983년 결성된 국제적 정당 연맹으로, 존 하워드 호주 전 총리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집행위 회의에는 한국의 한나라당 등 28개국 정당에서 60명이 참석했음. 대만 국민당은 1994년 IDU 가입 후 1998년에 이어 12년 만에 다시 집행위 회의를 개최했음.

● “태압류 북한 무기 최종목적지 확인안돼”(종합)(2/1)

- 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산 무기 40t을 운송하다 억류된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의 최종 목적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며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AP통신이 1일 보도했음. 외신들이 최근 입수, 공개한 태국 정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억류된 화물기의 최종 목적지는 이란 수도 테헤란의 마흐라바드 공항이고 무기를 선적한 업체는 북한의 ‘조선기계산업’(Korea Mechanical Industry)인 것으로 드러났음. 파니탄 와타나야콘 태국 정부 대변인은 이 보고서 내용과 관련, “보고서에 나와있는 이란은 비행일정에 따른 목적지를 밝힌 것일 뿐”이라며 “이것을 토대로 압류된 무기의 최종 목적지가 이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밝혔다.
- 파니탄 대변인은 “압류된 무기의 최종 목적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무기 압류 당시 억류된 승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억류된 무기의 최종 목적지로는 비행경로 상에 있던 스리랑카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이란, 수단, 미얀마, 파키스탄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벨라루스 출신의 조종사 미카일 페투코는 화물기 목적지가 우크라이나 키예프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페투코를 비롯한 승무원 5명의 변호를 맡은 솜삭 사이통은 “나는 비행기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비행기가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었고 그곳에서 화물을 하역할 계획이었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말했다. 사이통은 이어 검찰이 승무원들의 구금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일 전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승무원들은 화물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 “北, 시리아에 핵 관련 합금제조 기술 제공”(2/1)

-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에 사용될 수 있는 고강도 합금제조 기술을 시리아에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가 서방측 정보기관 사이에서 확산하



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일 보도했음. 신문은 “시리아 동부 홈스에 있는 군사 시설에 최근 들어 항공기 엔진, 화학무기용 탄두는 물론 우리늄 농축시설의 소재에도 사용되는 고강도 합금 제조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서방 정보기관들이 관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합금은 일본을 포함해 각국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지만 북한은 이미 용광로와 금형을 시리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 기술자가 현지를 방문, 관련 기술 지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합금제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북한은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2007년에도 시리아에 원자로 기술을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건설 중인 관련 시설을 공습하기도 했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정보가 사실이라면 중단됐던 것으로 보였던 북한과 시리아 간의 군사협력 재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관계국들 사이에서도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군사현안 ‘줄다리기’ 시작되나>(2/7)

- 한미 군 당국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음.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 미사일방어(BMD)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 주한미군 해외 차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반도를 둘러싼 민감한 군사현안을 놓고서임. 미국은 2월 들어 단 며칠 새에 그간 잠복되어 있던 BMD와 주한미군 차출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렸고, 한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진화하는 데 급급했음. 논란의 불씨는 미 국방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비롯됐음. 미 국방부는 QDR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이 전진배치 개념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주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주한미군을 전세계의 우발사태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다고 적시했음.
-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맞춰 해외 주둔한 미군이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파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우리 정부는 미국의 주한배치 전력 약화라는 여론에 따라 줄곧 반대하다 지난 2006년 그 ‘원칙’에 합의한 바 있음. 하지만 실제로 주한미군이 해외로 나가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미 국방부에 의해 공식화되면서 그 우려가 표면화된 것임. 여기에 주한미군의 전진주둔화가 3~4년 내에 완료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주한미군사령부는 “2010년대 후반이나 되어야 가능하다”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진화에 부심했음. 우리 정부도 실제로 미군 일부가 ‘면훗날’ 역외로 이동할 경우에는 확실한 대체전력이 제공될 것이며 이를 위해 한미 간 협의



를 해야 할 문제라고 못박았음.

- BMD 문제에 있어선 보다 더 미묘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음. 미 QDR이 한국을 BMD 체제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표명한 국가로 분류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나선 데 이어 페피노 드비아소 미국방부 미사일방어정책국장이 이에 대해 한미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한국 국방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서면서 ‘진실 게임’ 양상을 보인 것임. 당장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이번 논란은 전세계적인 MD 방어망 구축을 추진 중인 미국이 오래 전부터 한국의 참여를 비공식적으로 타진해왔고 낮은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었을 수 있다는 가정과 주변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입장이 맞물린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임.
- 국방부가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국제정세 등을 종합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도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임. 러시아가 최근 루마니아가 미국의 MD 참여 제안을 수용하는 등 유럽에 MD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로 적시한 데서 보듯 주변 강대국의 맞물린 이해는 우리 정부의 ‘미국형 MD’에 쉽사리 동참할 수 없게 하는 이유임. 미국이 우리의 최우선 동맹임에는 분명하지만 외교 다변화를 천명한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요구에만 천착할 수 없다는 것임. 여기에 우리 군은 미국의 MD에 참여하는 대신 2012년까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하층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형 MD체계’를 갖추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상태임.
- 북한의 미사일 공격 방어망을 자체 구축하면 되지 굳이 같은 목적으로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임. 군 관계자는 7일 “미국의 언급은 단지 미국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현재로서 우리는 미국의 MD망에 들어갈 계획이 없다”고 말했음.
- 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다소 양상이 뒤바뀐 분위기임. 우리 정부는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일관된 연기요구를 미측에 전달하는 등 내심 전작권 이양 시기 재검토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미국은 약속된 전환 일정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음. 사안의 휘발성이 워낙 강해 국내 일각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미국의 의중을 떠보는 형식이지만 미국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 분위기임.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내의 전작권 전환 연기론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대신 MD 참여를 보장받으려는 ‘연계론’을 구사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됨. 미국의 QDR 발표를 계기로 MD 참여와 주한미군 차출, 전작권 전환 등 한미 군사이슈에 대한 당국 간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음.



● <美의회, 한반도 유사시 軍대처 방안 추궁>(2/5)

- 미국 의회가 한반도 등 잠재적 ‘갈등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이 능동 대처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지와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연일 날카로운 추궁을 하고 있음. 하원 군사위는 4일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스티브 스탠리 합참 군구조·자원담당 국장(중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청문회에서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불박이 병력’을 주둔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의 유사사태에 기동력있게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해 따져 물었음. 의원들은 오는 2011년 말이면 이라크에서 미군의 철수가 완료되고, 아프간의 철군도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등 군운용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시점에 맞춰 국방부가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를 파악했음.
- 벽 매키언(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이라크와 아프간에 현재 병력이 머물고 있는데 한국에서 (북한의) 중대한 기습공격 등이 발생하는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음. 현재 주한미군을 지원할 지상군이 투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도 요구했음. 이에 대해 플러노이 차관은 “우리는 그런 종류의 시나리오를 들여다 봤다”면서 “이 곳에서 기밀사항을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으나, 그런 종류의 사태에서 미국은 해·공군에 집중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플러노이 차관은 “우리는 (분쟁지역) 동맹의 지상전력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신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반도 등에서 군사충돌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이 초기에 해·공군력을 투입하고 추가로 지상군을 동원, 배치하겠다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임.
- 게이츠 장관은 전날 하원 군사위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남한·)에 신속하게는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지상군 투입의 지연에 따른 초기 공백은 해군과 공군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조 세스텍(민주, 펜실베이니아) 의원이 한미연합사의 전면전 대비계획인 ‘작계 5027’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지상군 투입에 문제가 없느냐고 따진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던 것임. 이날 플러노이 차관과 함께 출석한 스탠리 국장은 미 국방부가 그동안 한반도를 포함해 3가지 유형의 비상사태 시나리오에 대비, 미군을 운용하는 실험을 해왔다고 밝혔음.
- 스탠리 국장은 “3가지 유형은 (미군 전력운용과 관련해) 다른 식의 조합을 해야하기 때문에 각각 완전히 별개의 시나리오”라며 “물론 거기에는 한국(의 유사사태)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언급했음.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유사사태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을 피했으나, 워싱턴 싱크탱크 등을 중심으로 중국(양안 분쟁)과 이란이 비상계획 대상에 포함된다는 관측이 기정사



실처럼 받아들여져 왔음.

● 美 “한반도 유사사태 등 3개 시나리오 실험”(2/5)

-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포함한 3가지 유형의 비상사태 시나리오에 대비, 이미 군병력 운용계획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스티브 스탠리 합참 군구조·자원 담당 국장(중장)은 4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외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대비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3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해 군(운용)을 실험했다”고 밝혔다. 스탠리 국장은 “(3가지 시나리오에는) 한국이 물론 포함된다”면서 “우리는 단순히 군의 능력을 키운 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다른 경우의 수에 맞춰서 실험을 했다”고 강조, 3가지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상정한 ‘맞춤형’ 비상계획의 훈련이 완료됐음을 시사했음.
- 한반도 이외 나머지 2개 지역은 중국(대만과의 양안분쟁), 이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는 “이런 실험은 군의 신축성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지상군의 규모는 그중 일부”라고 설명하면서 “3가지 다른 시나리오에서 군 규모에 대한 실험은 만족할만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재 남한에 있는 미군을 지원할 지상군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음. 다만 스탠리 국장은 미군이 이라크 및 아프간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가까운 장래에 한국과 같은 규모의 또 다른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면 미국은 불가피하게 군 자원을 추가 동원할 필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한미, ‘美 보완전력 제공’ 문서화 합의(2/5)

-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국이 제공할 ‘보완전력’을 문서화해 국방장관끼리 서명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음. 군 소식통은 5일 “미국과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에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보완전력 제공을 문서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곧 양국 국방장관이 이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음. 한미는 보완전력 문서화 작업을 올해 중순께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소식통은 “보완전력 제공을 명시한 문서에는 구체적인 지원전력 목록의 일부와 감시·정찰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게 될 능력을 제공한다는 표현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대북 억지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한국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기로 약속했지만, 그간 이를 문서화하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음. 그러나 미국이 태도를 바꿔 보완전력 제공을 문서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전작권을 한국



군으로 반환하겠다는 의지 표현임과 동시에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한 것이란 분석임. 이에 합참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미측과 어떤 보완전력이 제공될지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의 보완전력 목록을 식별하는 작업을 구체화해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 국방부 “美와 MD협의 없었다”(2/5)

- 국방부는 5일 미국 국방부 관리가 미사일방어(MD)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범위와 수준을 놓고 적절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현재 미측과 MD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가 MD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한국의 MD에 대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원 대변인은 “한국의 MD 참여 문제는 한반도 안보와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우리 군 차원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을 사전 방어하고 탐지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앞서 페피노 드비아소 국방부 미사일방어정책국장은 워싱턴D.C 외 신기자클럽에서 탄도미사일방어계획검토(BMDR) 보고서 설명을 위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미사일방어계획을 위한 협력의 기회, 공동의 이해 개발, 위협의 성격, 양자의 협력 방식 등이 무엇인지를 놓고 지속적으로 대화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의 대화에는 미국과 한국의 안보 프레임워크내에서 미사일 방어계획에서의 한국의 적절한 역할(proper role)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게이츠 “美육군, 유사시 한반도 투입 지연”(2/4)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3일 북한의 군사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 미 육군의 남한 내 투입이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남한)에 신속하게는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한미연합사의 전면전 대비계획인 ‘작계 5027’에 맞춰 육군을 투입하는 것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거기(남한)에 가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상군 투입의 지연에 따른 초기 공백은 “해군과 공군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의 이런 언급은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아프간에 대한 병력투입을 마친 후 언제쯤 미 육군이 이라크 배치 이전상태로 돌아가 다른 전쟁계획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 수 있게 되느냐”는 조 세스택(민주.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 이날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이라크에서 육



군병력이 모두 철수하는 2011년 말은 육군의 장비 및 실전훈련과 관련된 리셋(재설정)이 시작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2개의 전쟁을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계 다른 지역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 지상군이 작전계획대로 해당지역에 제때 투입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 지난 2007년 피터 페이스 당시 합참의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을 비롯해 (이란, 중국) 3개 주요 비상사태를 해군, 공군, 예비전력을 이용해 다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전쟁에 개입해 있는 상태에서 군자원을 재동원,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에 맞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또 같은 해 리처드 코디 당시 육군 참모차장도 하원군사위에 출석해 “다른 지역에 배치될 전력의 전투준비태세가 계속 약화되고 있다”면서 “다른 곳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투입될 미군 예비전력의 준비태세가 취약한 수준”이라고 증언한 바 있음.

● 주한미군 “병력 2010년대 후반이후 차출가능”(2/4)

- 주한미군사령부는 4일 주한미군 병력을 역외 지역으로 차출하더라도 2010년대 후반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주한미군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군부대 병력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전개할 계획이 현재는 없다”며 “한국에서의 근무정상화 계획은 보도된 것처럼 3~4년 내에 완성되지도 않을 것이며, 2010년대 후반에 가서야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음. 이는 2010년대 후반에 주한미군의 근무정상화가 완성돼 병력의 해외차출 여건이 마련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임.
-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가족 동반 3년 근무제 정착을 의미하는 ‘주한미군 근무 정상화’가 완료되면 주한미군의 해외차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일각에서는 그 시기가 향후 3~4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이와 관련, 주한미군 관계자는 “2010년대 후반은 2018~2019년 이후로 보면 무난하다”고 말했음.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도 전날 육군사관학교 생도 대상 강연에서 세계 공동 안보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해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이 가능하지만 이는 한미 정상회담이 전제되어야 하며 시행에 장기간이 걸릴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혔음.
- 주한미군은 아울러 “한국의 안보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여전히 주한미군의 핵심 임무이며,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하여 어떤 병력 감축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미국은 전 세계 방어태세를 위해 잘 조정되고 계획된 해결방법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안보는 여전히 중요한 핵심 분야이고 최우선적 사항”이라고 했음.



● 김국방 “전작권 전환 충분히 검토할 것”(2/4)

- 김태영 국방장관은 4일 오전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를 각각 신년 인사차 방문해 군 원로들로부터 국방정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음.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장관이 매년 초 향군과 성우회를 방문해 군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오늘도 신년 인사차 예방하기 때문에 덕담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그러나 향군과 성우회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 연기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김 장관에게도 같은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됨.
- 향군은 특히 이 날짜 일부 언론에 낸 ‘의견광고’를 통해 “한미연합사는 한국 방위의 핵심이며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음. 이와 관련, 김태영 장관은 향군과 성우회 방문차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와 만나 “(전작권 전환작업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음. 앞서 정부는 3일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우려감을 전달했음. 이에 캠벨 차관보는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파트너 국가로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국 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변했음.

● <캠벨, 분주한 서울 행보 이어가>(2/4)

- 방한 중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서울 체류 마지막 날인 4일에도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음. 캠벨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림동 정부중앙청사 본관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예방한 뒤 곧바로 외교부 청사로 이동,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을 갖고 6자회담 재개 방안 등 북핵 문제와 북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음. 위 본부장과 회동을 마친 캠벨 차관보는 이어 유명환 외교장관을 예방, 한미동맹 재조정과 북핵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음. 그는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고감도 조율을 벌이는 느낌을 줬음.
- 캠벨 차관보는 현 장관을 만난 뒤 “한미는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을 함께 추구하는데 대해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며 “의견 일치를 본 것의 핵심은 향후 정상회담 및 6자회담 틀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양국이 반드시 조율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음. 위 본부장은 캠벨 차관보에게 최근 새로 부임한 조현동 북핵외교기획단장과 김홍균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소개하기도 했음. 외교부 당국자는 “위 본부장과 캠벨 차관보의 회동은 한·미 양국이 조속한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재개시 비핵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밤늦게 입국한 캠벨 차관보는 앞서 3일에는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이용준 차관보, 이혜민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만났으며 이날 유 장관 예방을



마친 뒤 낮 비행기로 귀국길에 오름.

● <한미, 남북정상회담 놓고 미묘한 기류>(2/4)

- 속도감이 느껴지던 남북 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에 미묘한 기류가 조성되고 있음.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향을 계기로 정상회담 추진의 ‘페이스’가 조절되는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는 것임. 무엇보다도 캠벨 차관보의 2일 발언이 묘한 파장을 드리우고 있음. 캠벨 차관보는 이용준 차관보와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바로 다음에 와야 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음.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자 나온 답임. 이는 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선후관계에 대한 미국의 스탠스를 반영하는 것으로 외교가에 받아들여지고 있음. 다시 말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상회담 자체는 지지하지만 지금으로서는 6자회담 복귀가 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는 분석임. 이는 캠벨 차관보가 같은 날 언론인 간담회에서 “초점을 흐트리지 말자(No distraction)”고 거듭 강조한 것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옴. 6자회담 조기재개를 겨냥한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현 국면에서 정상회담 추진으로 인해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말자는 의미라는 것임.
- 이런 가운데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3일부터 2박3일간 일정으로 ‘조용히’ 방미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행보로 비쳐지고 있음. 정부의 정상회담 추진이 공식화되는 흐름 속에서 청와대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가 백악관에 들어가 협의를 갖는 성격이기 때문임.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정상회담 추진을 둘러싼 한·미간의 의견조율에 뭔가 순조롭지 않은 대목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캠벨 차관보가 이날 오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만난 뒤 내놓은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됨. 그는 “우리가 의견일치를 본 것의 핵심은 향후 정상회담 및 6자회담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반드시 조율을 해야 할 필요성”이라고 말했음. 정상회담 추진을 둘러싸고 양측 간에 시각차 내지 온도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게 외교가의 해석임. 전날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3일 YTN 포커스에 출연,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6자회담 관련국 간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목할 점은 양국이 김 비서관의 방미를 계기로 어떤 방향으로 정상회담 추진을 조율하느냐임. 일단 김 비서관은 정상회담 추진의 배경과 방향을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정부가 추진하는 정상회담이 6자회담을 추동 내지 촉진하는 성격이고 6자회담의 초점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임. 한 고위소식통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협상하는게 아니다”며 “정상회담에서



큰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협상은 6자회담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이 오히려 6자회담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설득이 힘을 얻을 경우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정상회담과 6자회담이 열리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음.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정상회담 추진 시기가 6자회담 직후로 조정되는 ‘속도조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캠벨 차관보의 발언에서 읽히는 것처럼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현 시점에서 정상회담 추진이 자칫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의 초점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여기에 보수적 정치여론을 크게 의식하고 있는 양측 정부의 정치적 환경도 이 같은 속도조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음.

-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양측의 입장 조율은 캠벨 차관보가 이날 현인택 통일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위성락 평화교섭본부장을 면담하고 김 비서관이 백악관 주요 당국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며 큰 틀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이 6자회담에 앞서 열리던, 뒤에 열리던 6자회담을 촉진하기 위한 성격이라는데 대해서는 한·미간의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 정몽준 “전작권 재검토, 기존 합의내서도 가능”(2/4)

-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4일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와 관련, “국가간 약속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쉽지 않은 면이 있지만 전작권 이행사항을 평가키로 한 조항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기존 합의안에서도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전날 전작권 발언을 긍정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캠벨 차관보가 ‘(전작권 반환에 관한 한국 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양국 고위 지도자들간 더욱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전작권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다행스러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시절 많은 안보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합의해 발표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노무현 정부가 자주국방을 내세워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면서 미국이 정치적으로 불쾌하게 생각한 것 같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안보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무책임한 제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고 무력시위를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캠벨 차관보의 진지한 대화 필요 발언은 커다란 변화이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 정 대표는 “전작권 전환 배경이나 이후의 안보변화를 고려하면 전작권 논의는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양국의 공동목표



는 급변하는 국제변화에 맞춰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임. 전작권 전환에 대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또 감정을 털고 논의하면 굳건한 미래 동맹관계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샤프 “세계안보문제 발생 시 주한미군 차출”(2/3)

-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3일 “주한미군은 세계 공동의 안보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로 전개될 것”이라며 “물론 (차출되더라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책임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용산 주한미군기지에서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가진 강연에서 “한국 주둔 미 전력의 역할은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 공격 시 한반도 방위를 위해 작전계획을 신속히 시행하며, 역내 파트너국들과 교류하며 세계로 전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차출이) 충족되려면 한국 정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장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미래 언젠가 양국 정상이 합의하고 한국이 준비되면 세계 지역으로 전개해 세계 안보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방한 중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나 지진, 한반도 밖에서 한미가 공통으로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군사력이 신속히 대응할 힘을 높이는 게 적절한 유연성(Modest Flexibility)”이라며 “이런 유연성은 전략적 억제력과 한반도 안보조치가 확고한 상태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군사력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이어 “한국군은 2012년 4월17일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게 될 것이며, 전시 한반도 방어에 주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미국은 현재와 같은 주한미군 병력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은 지속적인 능력을 제공하는 등 한반도에 대한 공약이 변함없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우산은 물론 전작권 전환이후 부족부분에 대한 보완전력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美 “한·미·일, 北비핵화 핵심 파트너”(2/3)

- 조 도노반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일 “한·미·일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핵심 파트너”라면서 “특히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그렇다”고 3국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도노반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자대화’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의 한국, 일본과의 동맹은 아태지역에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을 공동으로 제공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이어 지난해 한·미·일 3국간의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음을 상기시키면서 “공통의 가치와 안보이해 공유 등에 바탕을 둔 3국간 협력을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의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파견 결정과 관련, “매우 의미있는 기여”라고 사의를 표했음. 도노반 부차관보는 행사 뒤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6자회담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한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성사시키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미·일 3자 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일본 방위성의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정무관은 방위성 관계자가 대독한 연설을 통해 ▲안보환경 평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강화된 협력 ▲재난구조 및 인도적 지원분야 협력 ▲공동 군사훈련 분야 등에서 한·미·일 3자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음. 그는 또 3자간 균열이 발생할 경우 덕을 보는 것은 북한뿐이라면서 “한·미·일 3국은 북한에 대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일관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軍 “MD, 안보상황·국제정세 고려해 검토”(2/3)



International Activity Highlights



- 국방부는 3일 한국의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와 관련,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으며, 미국 정부가 한국에 BMD 체제 참여를 공식 희망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음.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MD 참여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음. 원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는 위협의 사전 탐지 및 방어태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 MD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2012년까지 북한의 미



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하층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형 MD체계’를 갖추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상태임. 원 대변인은 한국, 미국, 일본의 지상군이 합동훈련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지상군 차원에서 3국의 합동훈련이 논의된 바 없다”며 “미 태평양군사령부의 벤저민 믹슨 중장이 다국적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한·미 “6자회담 先복귀” 보폭 맞추기>(2/3)

- 북핵 6자회담 재개 흐름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보폭 맞추기에 적극 나서고 있음.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2~4일)이 고리가 되고 있음. 양측은 그의 방한을 계기로 서로 호흡을 맞춘 듯한 대북 메시지를 잇따라 발신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한·미 양국이 다시금 주파수를 조율한 북핵 대응기조는 북한의 우선적 6자회담 복귀임. 이는 북한이 최근 강·온 양면책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시선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흐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됨. 한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전략·전술에 말려들지 말고 초점을 계속 6자회담 복귀에 집중하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와 평화협정 논의는 ‘후순위’로 돌리겠다는게 한·미의 정리된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음.
- 2일 저녁 방한직후 “제재 완화를 논의하기 이르다”고 일성을 냈던 캠벨 차관보는 이날 오전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2005년과 2007년에 취해진 조치를 북한이 다시 약속하기 전에는 제재 해제나 평화협정을 논의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외교부 청사에서 이용준 차관보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바로 다음에 와야 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낮 YTN ‘포커스’에 출연, “6자회담을 통해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대북제재도 완화될 수 있고 북한이 원하는 여러 가지 안보적 공약이라든가 경제적 지원도 얻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특히 주목할 점은 캠벨 차관보가 북한에 대해 2005년과 2007년의 입장을 다시 약속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대목임.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를 6자회담 재개의 ‘출발점’으로 거론하고 있는 셈임. 이는 단순히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른 ‘성의있는 조치’가 있어야 제재완화와 평화협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음. 외교가가 또 하나 주목하는 점은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과의 선후관계에 미묘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점임. 캠벨 차관보는 이날 오후 이 차관보와의 면담을 마친 뒤 “남북 정상회담



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바로 다음에 와야 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 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6자회담에 선행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6자 회담을 촉진 또는 추동하는 성격이 돼야 한다는데 점을 분명히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음. 캠벨 차관보가 이날 언론인 간담회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한·미간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명한 장관이 YTN 인터뷰에서 “6자회담 관련국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 조심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조기추진 움직임에 일정한 ‘속도조절’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음. 캠벨 차관보는 4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날 예정이어서 양측의 공조 스탠스 논의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美측에 전작권 재협상 여부 타진(종합2보)(2/3)

-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를 위한 재협상 여부를 미측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3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우려감을 미측에 전달했다”면서 “미측도 이런 우려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하면서 전환시기 연기를 위한 재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캠벨 차관보는 이날 서울 남영동 미대사관 공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파트너 국가로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국 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양국 고위 지도자들간 더욱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에 한미가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종 점검 작업을 진행하는 데 여기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해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 그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우려감을 제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한미동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며 “정부는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2012년 4월 전환 시기 전까지 해결을 해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를 위한 재협상 문제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난달 20일 ‘2012년 전환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양국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 김 장관은 당시 서울 조선폰에서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



동주최한 동북아 미래포럼 세미나에서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군은 그것을 준비해야 하며 (전환 연기 등) 재조율은 정치적인 판단까지 덧붙여 한미 간에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연기를 위한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재협상 가능성을 전제로 놓고 있지 않다”면서 “국방부는 합의된 시한에 맞도록 준비하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합참은 올해까지 전작권 전환 준비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운용능력(IOC)을 점검한 뒤 내년에는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고 2012년 4월 이전에 최종검증한 다음 그해 4월17일 전작권을 넘겨받는다든 계획임.

● 캠벨 “전작권 우려감 진지하게 받아들여”(종합)(2/3)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일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환반환 문제와 관련,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파트너 국가로서 (전작권 반환에 관한 한국 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양국 고위 지도자들간 더욱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서울 남영동 미대사관 공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는 현재나 미래에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약속이 얼마나 확고한 지를 안심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캠벨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말 김태영 국방장관이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것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언급한 이후 재검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전작권 반환 논의의 향배가 주목됨. 그는 “한국 군사력과 한국 고위지도자들의 판단에 우리는 커다란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지도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들은 바 있다”며 “한국의 파트너들의 안보나 자신감을 저해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벨 차관보는 또 미국 국방부가 최근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해외차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긴급사태나 지진, 한반도 바깥에서 한국과 미국이 공통으로 문제에 대응해야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군사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높이는게 작은 유연성(Modest Flexibility)”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이 같은 작은 유연성은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실하고 깊은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유연성은 전략적 억제력과 한반도 안보조치가 확고한 상태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QDR의 다른 부분을 보면 괌이나 한반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나와 있다”면서 “이 역시 한반도의 안정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캠벨 차관보는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2005년(9.19 공동성



명)과 2007년(2.13 합의)에 취해진 조치를 북한이 다시 약속하기 전에는 제재 해제나 평화협정과 같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며 “사고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6자회담의 재개라는 핵심적인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음. 캠벨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일단 6자회담에 복귀하고 다시 한번 2005년과 2007년의 입장을 약속한다면 그때 가서는 다양한 사안들에 관해 양자회담도 가능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관련된 다른 조치들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에 따라 6자회담과 평화체제 논의의 병행 가능성을 시사했음.

- 캠벨 차관보는 또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을 거론,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러한 인센티브는 정치적·경제적·인도주의적·기술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명백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어 “6자회담의 본질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된 사안이며 만약 북한이 인권이나 핵에 대해 진정한 진전을 보인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외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음. 캠벨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의 핵포기를 포기하고 핵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오바마 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관해 목표가 무엇인지 일관되게 이야기 해왔다”면서 핵 능력 폐기와 핵 확산 예방 두 가지 모두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음. 그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한·미간 조율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 대해 우리가 이보다 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며 “우리는 정상회담 가능성을 포함한 한국 정부와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에 대한 제안이나 전망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하고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은 6자회담과도 긴밀히 협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주한미군 가족동반제 완료되면 차출 가능”(2/2)

-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가족동반근무제가 완료되면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음. 미 국방부는 1일 발표한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주한 미군은 ‘전진배치’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주둔’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주한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전 세계의 비상사태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는 ‘군병력의 풀(pool)’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이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의 시행 시점이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3년근무제가 정착한 이후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임. 주한미군은 그동안 가족 동반 없이 대부분 1년 단위로 한국에 머물러왔음.
- ‘주한미군 주둔 정상화’ 정책으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앞으로 3~4년



내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 시점을 전후해 미국의 전 세계적 군운용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이 기동성을 갖춘 전략적 유연성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차 커짐.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주둔 성격을 이처럼 바꾸는 것은 한국을 사실상 ‘비전투 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결국 주한미군의 차출을 위한 명분을 쌓는 것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음.

- QDR 보고서는 또 “미 국방부는 한국, 일본과 이미 합의된 계획과 공통의 비전을 이행함으로써, 양자적으로는 물론 지역적, 나아가 전 세계적 범주에 걸쳐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과 이란은 국제적인 규범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탄도미사일 시스템의 활발한 실험과 실전배치를 하고 있다”며 “이들 상당수 미사일은 이라크가 1991년 걸프전쟁 당시 사용했던 스킨크급 미사일 보다 더욱 정밀하고, 사거리가 더 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들의 미사일 시스템 능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미사일 보유량이 늘어난다면, 갈등지역에 전진배치돼 있는 미군은 냉전 종식 이후 누려왔던 상대적인 안전함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음.

나. 한·중 관계

● 한·중·일 ‘상설사무국’ 서울 설치(종합)(2/2)

-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위한 상설사무국이 서울에 설치됨. 한·중·일 3국은 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후정웨이(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2일 밝혔음. 3국의 상설사무국 설치 합의는 동북아 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3국의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외교부 당국자는 “아세안(ASEAN)과 버금가는 동북아의 제도화된 국가그룹이 생성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하고 “서울에 유치되는 최초의 다자관계 사무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설사무국은 한해 50여 차례에 달하는 한·중·일 정상들의 양자 및 다자모임을 통합·조정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 상설사무국은 필요한 예산조달과 인력선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3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상설사무국 서울 설치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최종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 한·일 관계

● <한일 국회의원, 한반도 비핵화 논의>(2/4)

-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임. 핵감축을 목표로 전세계 500여명의 의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핵감축의원네트워크(PNND) 한국위원회는 이달 말 일본 도쿄 일본청년관 국제홀에서 양국 PNND 회원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동북아 비핵지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는다고 4일 밝혔다. 27일에는 비핵화 시민단체인 한국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와 일본 피스데포 우메바야시 히로미치의 기조연설이 진행되고, 28일에는 핵문제에 관한 한일 국회의원 모임도 이뤄질 예정임. PNND 한국 대표단은 내달 1일에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임.
- PNND 한국위원회에는 여야 의원 15명이 활동하고 있음. 양국 PNND 회원간 비핵화 관련 논의는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열린 간담회 이후 두 번째임. PNND 공동대표인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오전 국회에서 PNND 한국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회-시민단체간 간담회에서 “핵문제와 관련, 한반도는 어느 곳보다 중요한 지역으로 그만큼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달 말 일본에서 한일 PNND 회의를 열어, 5월 미국에서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대한 관심을 서로 같이 나누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정옥식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동북아-세계를 잇는 ‘3박자 비핵화론’은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한에 대한 미국 핵위협을 해소를 담은 ‘조선반도 비핵화’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음. 정 대표는 또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의 철수 및 핵무기 재반입 금지를, 북한은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와 IAEA 추가의정서 서명·비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 <日외상 강제병합 발언 ‘아슬아슬’>(2/3)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이 한일 강제 병합과 관련해 아슬아슬한 발언을 했음.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카다 외상은 2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과 관련,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당시의 세계에서 보면 일본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일본만 식민지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강제병합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었음. 오카다 외상은 하지만 곧바로 “병합된 측에서 보면 조국이 없어지고 일본 성을 쓰는 등 병합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고통을 느낀 측의 기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균형을 잡았음. 오카다 외상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0~11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외교 현안을 논의



함. 오카다 외상은 유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미·중 관계

● 中 “오바마-달라이라마 면담 반대”(2/6)

- 중국 외교부가 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이달 안에 만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재차 표명했음.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성명을 통해 “중국은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 내용에 대해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음. 마 대변인은 “중국은 달라이 라마의 미국 방문은 물론 미국 지도자들이 달라이 라마를 접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은 작년 11월 방중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지도자들이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음. 그는 “미국은 티베트 이슈가 고도의 민감성을 가진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 달라이 라마의 방미와 미국 지도자와의 접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음. 미국 백악관은 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달 중 백악관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 美 “북핵문제, 中과 공동이익 가진 사안”(2/5)

- 미국은 4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및 중국 환율문제 언급 등으로 최근 악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가 북핵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미·중관계 악화가 북핵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으며 북한도 이 가운데 중요한 하나”라고 말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우려에 의견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우리는 6자회담 내에서 북한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중국과) 일치한다”면서 “우리의 (대북) 메시지는 똑같다”고 말했음. 그는 “6자회담에 대해 우리가 완벽히 협력해 나가면서도 다른 측면의 관계에서는 긴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북핵 문제 외에 다른 분야에서의 미·중간 갈등의 소지는 인정했음.

● “中, 주미대사 곧 교체.. 장예수이 유력”(종합)(2/5)

- 중국이 조만간 주미대사를 교체하는 등 주요 외교라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5일 중국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장예수이(張業遂, 56) 주(駐) 유엔대사를 주미대사에 기용하는 등 미국과 유엔 주재 대사직



- 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음. 중국의 새로운 주미대사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결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계획, 중국의 인터넷 검열 문제 등으로 악화된 중국과 미국관계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저우원중(周文重. 65) 현 주미대사는 정년 연한이 돼 조만간 물러나게 됨.
- 이번 인사에서는 또 허야페이(何亞非. 54) 외교부 부부장이 리바오둥(李保東) 제네바 주재 유엔대사 자리를 맡게 되고 리바오둥 대사는 유엔대사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음. 중국 정부의 이번 인사는 지난해 말 추이텐카이(崔天凱) 전 주일대사, 푸잉(傅瑩) 전 주영대사, 자이진(翟雋) 전 부장조리(차관보급) 등 3명을 부부장(차관급)에 임명하는 수뇌부 인사를 단행한 데 이은 후속 인사의 성격을 띠고 있음. 진찬룽(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이번 인사이동은 중국의 외교정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과거에 비해 자주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또 중국 외교부의 인사가 과거에 비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과거에는 정치적인 지침이나 다른 요소들이 승진의 주요 기준이 됐지만 현재는 근무연한과 업적이 중요한 기준이 됐음.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 주미대사와 주 유엔대사는 외교라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상 부부장급 인사가 맡는 것이 관행임.
 - 양제츠 외교부장과 전임자인 리자오싱(李肇星)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도 주미대사를 거쳤음. 그동안 중국 정부의 차기 주미대사 후보로는 장 주유엔대사와 함께 허 부부장이 거명돼 왔음. 외교소식통들은 장 대사가 허 부부장에 비해 5년이나 앞선 2003년 부부장직을 맡는 등 선배라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음.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외교부의 독특한 측면은 승진 시 근무연한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장 대사를 새로운 주미대사에 기용하려는 데는 미국통인 그에게 대미 외교사령탑을 맡겨 중국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관철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왕판(王帆) 소장은 “중국과 미국간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은 대부분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 “새로운 주미대사는 미국에 중국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미국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음.
 - 후베이(湖北)성 출신인 장 대사는 5년간 유럽과 정책연구 분야 담당 부부장으로 재직하다 2008년 9월 왕광야(王光亞) 전 대사의 뒤를 이어 주 유엔대사를 맡아왔음. 저장(浙江)성에서 태어난 허 부부장은 2008년 부부장에 발탁돼 미국, 홍콩, 마카오 관련 업무와 의전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음.



● 가이트너 “中, 위안화 절상 낙관”(2/5)

-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4일 중국이 표면적으로 미국의 위안화 절상요구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위안화 절상을 허용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율 문제가 무역경쟁에서 미국에 막대한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압력 수위를 더 높여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 중국 위안화 문제에 대한 질문에 중국 당국자들이 더 유연한 환율이 자국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음.
- 그는 “실제로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음. 벤저민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의 환율 조작은 잘 알려져 있음. 오바마 행정부가 공정무역이란 차원에서 중국에 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용의가 있는냐”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을 주문했음. 이에 대해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은 그러한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에서 진전이 중요하다는 견해에 공감한다”고 답했음. 그는 환율 불균형 해소는 세계경제가 수출 주도의 성장모델이 아니라 강력한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미국의 노력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는 미국 수출기업에 공정한 경쟁기반을 제공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날 미국 제품이 수출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중국 등 아시아 국가 환율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환율 문제가 무역경쟁에서 미국에 “막대한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는 환율”이라며 “미국 제품 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가고 그들의 제품 가격은 내려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음. 이에 대해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비판과 압력 행사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미국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무역마찰 문제를 직시하고 평등한 협상을 통한 적절한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마 대변인은 “위안화 환율 문제가 중국과 미국 간 무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국제수지와 외환시장의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면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인위적인 환율 절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음.

● 美 “북핵문제, 中과 공동이익 가진 사안”(2/5)

- 미국은 4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라마 면담 및 중국 환율문제 언급 등으로 최근 악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가 북핵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미·중관계 악화가 북핵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으며 북한도 이 가운데 중요한 하나”라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우려에 의견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우리는 6자회담 내에서 북한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중국과) 일치한다”면서 “우리의 (대북) 메시지는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에 대해 우리가 완벽히 협력해 나가면서도 다른 측면의 관계에서는 긴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북핵 문제 외에 다른 분야에서의 미·중간 갈등의 소지는 인정했음.

● <美·中 갈등, 이젠 환율 문제로>(종합)(2/4)

-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달라이 라마 문제에 이어 이젠 위안화 환율 문제로까지 비화됐음. 중국이 올해 미국과의 관계를 그르칠 수 있는 3대 걸림돌로 꼽은 이슈가 2010년 들어 약 한달 사이에 다 나온 셈임. 허아페이(何亞非)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달 21일 양국이 올해 신중히 처리해야 할 3대 과제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와 달라이 라마 문제, 경제·무역 마찰을 꼽으면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관계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위안화 환율에 대한 공세는 미국이 먼저 시작했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음. 오바마 대통령은 환율 문제가 미국의 무역경쟁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과 무역에서 더 강력하게 기존 무역규칙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 이에 중국은 ‘사안을 이성적으로 직시하라’고 충고하며 맞받았음.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비판과 압력 행사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무역마찰 문제를 직시하고 평등한 협상을 통한 적절한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에도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함. 마 대변인은 “위안화 환율 문제가 중국과 미국간 무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면서 “현재 국제수지와 외환시장의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면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인위적인 환율 절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음. 앞서 주민(朱民)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달 30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의 느슨한 통화재정 정책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거듭 밝혔음.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도 지난해 11월 30일 유럽연합(EU)과의 제12차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절상 요구는 부당하다면서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했음.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안화 절상 문제는 해묵은 현안이지만 최근 양국관계가 급속도로 대립하는 가운데 수면 위로 부각된 것이어서 파급력은 과거에 비해 클 것으로 전망됨. 양국은 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달라이 라마 접견 문제로 전례 없는 갈등을 겪고 있음.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첨단무기를 판매키로 하자 미국과의 군사교류 중단을 공식 선언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접견할 경우 양국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양국 정부는 구글이 인터넷 검열과 해킹사건을 이유로 중국시장 철수를 선언하자 인터넷 자유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경제 분야에서 환율 문제 외에도 강관 등을 놓고 무역마찰도 빚어왔음. 지난해 ‘화합하면서 점차 가까워진다’는 뜻의 ‘화이점동(和而漸同)’으로 표현될 만큼 밀접해진 양국간 분위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임.
- 올해 불거진 각종 갈등 요소들은 양국이 쉽게 물러서지 못할 만큼 중요한 문제여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특히 과거 일방적으로 미국에 당했던 중국이 이제 할 말은 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줄 만큼 국력이 신장됐기 때문에 갈등은 언제든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진찬룽(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중국은 종전에는 미국으로부터 따귀를 맞고도 말로만 투덜거리며 욕만 했으나 이제 바로 따귀로 맞설 정도로 국력이 신장했다”면서 “중국이 티베트 문제와 환율, 무역마찰 등 문제에 대해 강경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국 사이에 크고 작은 파동이 칠 것”이라고 예상했음.
- 그러나 양국 관계가 작년에 비해서는 파동이 일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판을 깨지 않는 선의 평온은 유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옴. 마자오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관계가 이미 암흑기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은 세계의 평화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미국이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을 존중함으로써 중미 관계의 공통적인 발전을 수호하길 희망한다”고 말해 중국 역시 미국과의 완전한 관계 경색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음.

● 中 “美 비판·압력 도움안돼..평등협상해야”(2/4)

- 중국은 미국이 위안화 환율과 무역 문제에서 자국을 압박한 것에 대해 ‘사안을 이성적으로 직시하라’고 충고하며 비판했음.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비판과 압력 행사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무역마찰 문제를 직시하고 평등한 협상을 통해 적절한 문제해



결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 대변인은 “위안화 환율 문제가 중국과 미국간 무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국제수지와 외환시장의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면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인위적인 환율 절상이 없을 것임을 밝혔다. 그는 “2005년 7월 환율제도의 개혁 이후 우리는 주동적이면서 통제가능하고 점진적인 원칙에 따라서 변동환율제를 시행해오고 있다”면서 “위안화 달러 환율은 이미 20% 이상 절상됐다”고 말했다.

- 마 대변인은 중국은 무역흑자가 아니라 국제수지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간 경제 협력은 호혜상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들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음. 오바마 대통령은 환율 문제가 미국의 무역경쟁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과 무역에서 더 강력하게 기존 무역규칙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

● 美상원, 中구글해킹 비난결의안 채택(2/4)

- 미국 상원은 지난 2일 중국에서 발생한 구글 해킹 공격사건을 비난하고 중국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 에드워드 카우프만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상원은 한목소리로 중국 정부에 최근 사이버 공격사건에 대한 조사와 해명을 요구하고 또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언론과 인터넷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카우프만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최근 검색결과에 대한 중국당국의 검열요구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고 중국 시장 철수를 선언한 바 있음.

● 오바마 “中等 亞환율문제 반드시 해결해야”(종합)(2/3)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미국 제품이 수출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환율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면서 중국 등 아시아 국가 환율의 문제점을 이례적으로 직접 거론했음. 이는 중국 등 아시아가 미국의 가장 큰 시장이지만 미 달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 위안화 등 아시아 국가의 환율 문제를 미국이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으로 분석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는 환율”이라며 “미국 제품 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가고 그들의 제품 가격은 내려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율 문제가 미국의 무역경쟁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국과 무역에서 더 강력하게 기존 무역규칙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중국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강화할 것임을 선언했음. 그는 “우리의 접근은 기존의 무역규칙을 더 강하게 집행하려는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 상호주의 방식으로 그들의 시장을 개방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이러한 무역규칙 집행강화 사례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결정을 들면서 이는 올바른 조치였다고 평가하기도 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곳에 수출을 1%포인트만 늘려도 미국내 일자리가 수십만개에서 수백만개가 늘어난다며 “그것이 앞으로 수년간 수출 증시 전략을 추진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중국과 체결한 통상관계를 철회하려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기존의 통상협정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 中전문가 “美, ‘중국위협론’ 수위 낮춰”(2/3)

- 미국은 1일 발표한 ‘4개년 국방정책보고서(QDR)’에서 중국위협론의 수위를 낮추고 중국이 강국으로 부상한데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평가가 중국에서 나왔음.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리안(李岩) 연구원은 3일 중국 당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에 기고한 ‘미국국방전략 새국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논평했음. 그는 이번 QDR은 중국을 ‘미국의 최대 잠재적 군사 도전자’라고 지칭했던 2006년의 보고서와는 달리 ‘중국이 세계 속에 대국으로 우뚝섰다’는 내용의 중국굴기의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음. QDR은 중국이 대국굴기를 통해 아시아의 전략 판도를 바꾸고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강대하고 변명을 이룬 성공적인 중국 굴기에 환영한다”고 표현했다는 것임.
- 보고서는 그러나 미·중 관계가 복잡하고 불투명해질 때는 중국 위협론이 유효하며 중국의 불개입 선언과 군사적 투명성에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리 연구원은 지적했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위기에 공동 대처해야 하지만 악의적인 경쟁과 심지어 충돌의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윈취(尹卓), 쑤저(孫哲) 등 국제문제 평론가들도 2일 관영TV방송인 CCTV와의 대담 프로에서 미국이 이 보고서에서 중국위협론의 수위를 낮췄다고 논평하고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군사경쟁, 우주, 사이버전쟁 등에서 주요 라이벌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음.



● 中 “오바마, 달라이 라마 만나지 말라”(2/2)

- 중국 정부가 2일 미국 지도자들이 달라이 라마를 만난다면 “양쪽에 해가 될 뿐 이득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양국 관계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음. 티베트 문제 전담기구인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의 주웨이췌(朱維群) 상무 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측이 (달라이 라마 접견 계획으로) 국제적인 규칙을 위반하려 한다면 이같이 말했음. 주 상무 부부장은 특히 “미국이 (달라이 라마 접견)결정을 한다면 중국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이 발언은 미국의 대만무기판매에 따른 양국간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여파가 주목됨. 달라이 라마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언제 만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달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마이크 해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겠다는 의지를 중국 정부에 분명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주 상무 부부장은 아울러 최근 베이징을 방문했던 달라이 라마 특사와의 회담을 언급하면서 성과는 없었다고 전했음. 앞서 중국 공산당의 두칭린(杜靑林) 통일전선부장은 달라이 라마의 특사인 로디 갈리(甲日洛迪), 쉘상 갈첸(格桑堅贊)과 베이징에서 회담한 뒤 1일 발표한 성명에서 “티베트 주권에 관해선 양보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달라이 라마 측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음. 두칭린 부장은 구체적인 추가 협상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 정부의 달라이 라마에 대한 정책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대화와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이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음.
- 그러나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지만 달라이 라마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 달라이 라마는 현재의 티베트자치구뿐만 아니라 티베트인이 많이 거주하는 칭하이(靑海)성과 간쑤(甘肅)성 등의 일부를 포함해 중국 영토의 4분에 1에 달하는 지역에 ‘대티베트 자치구’를 만들어 고도 자치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준(準)독립을 요구하고 있음. 두 부장은 “소위 대티베트와 고도자치는 중국의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중국의 국가이익, 주권과 영토 수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협상의 공간과 타협의 여지도 없다”고 말해 대화가 계속 되는 것과 무관하게 달라이 라마 측의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
- 그러면서 그는 “달라이 라마 측이 국제사회에서 반중(反中)행위와 국가분열 행위를 계속하는 한 협상과 대화에 어떤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으면서 “달라이 라마가 이끌고 있는 망명정부 역시 불법적인 것으로 티베트와 티베트인민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음. 달라이 라마의 두 특사는 지난달 26일 중국에 입국,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와 공산당 당국자들을 만나 티베트 자치구 확대 여부 등 현안을 논의한 뒤 인도로 귀환했음. 중국 정부와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망명정부는 2008년 3월 라싸(拉薩) 폭동사태와 강경진압 후 3차례를 포함, 지금까지 모두 8차례 대화를 가진 바 있음. 라싸 사태 이후 티베트 망명정부는 자치권 확대를 요구해 왔으며 중국 정부는 최근 15개월간 1959년 티베트를 탈출한 달라이 라마의 우선 복귀를 주장하면서 티베트 망명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해왔음.

● “美기업 제재하면 中도 대가 치를 것”(2/2)

-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반발해 외국기업들을 제재한다면 중국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2일 경고했음. 신문은 중국이 외국 무기 공급업체들을 제재한다면 중국 국내 산업이 다칠 것이며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하게 되고 싼값에 장비를 살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음. 중국은 지난 주말 대만에 무기를 팔겠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직후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 등 미국의 무기 공급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음.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항공 산업은 국가가 지배한다”면서 “중국이 보잉사에 전면 제재를 가한다면 중국 민영 항공업계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신문은 “이는 대만에 12기의 미사일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벌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는 너무나 엄청난 대가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 에어버스는 최근 몇 년간 보잉에 비해 수주량을 늘려 중국 전체 민영 항공기시장 점유율이 36%를 기록하고 있지만 보잉사는 여전히 전체의 53%를 장악하고 있음. 중국 최대 국영 항공사 홍콩지사를 지낸 피터 록은 “중국은 유럽에 대해서도 실력 발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잉사 카드를 완전 포기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에어버스가 얻을 수 있는 횡재도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음.
- 중국은 2008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정부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에 대해 동정심을 표시하자 에어버스를 상대로 분노를 표출한 바 있음. 특히 이번 대만 무기판매와 관련된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등은 중국에서의 영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재 위협에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음. 중국시장 진출이 활발한 업체는 중국의 막대한 엘리베이터 시장과 에어컨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테크놀러지의 자회사인 시코르스키 항공임. 시코르스키는 전술 수송 헬리콥터인 블랙호크 60대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했음. 만약 중국이 엘리베이터 등의 제품 판매를 봉쇄하려 한다면 곧바로 외국 민간장비 공급업체에 대한 공개 차별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할 것임. 또 중국이 이들 제품의 중국시장 판매를 막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수출품도 미국시장에서 비슷한 금액의 보복 조치를 받을 것임.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도 WTO 규정을 알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도 받고 있는 만큼 보잉 등에 대한 제재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음 .

● <中, 美에 여론몰이 총공세>(2/2)

- 중국이 각종 이슈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에 대해 과거와 달리 여론몰이를 통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음. 가장 첨예한 갈등은 미국이 대만에 64억 달러 규모의 첨단 무기를 판매키로 한 데서 비롯됨. 중국 정부는 무기 판매가 승인된 직후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군사교류를 전면 중단키로 했음. 중국의 관영 언론들도 미국의 조치에 대해 ‘오만,’ ‘위선’ 등의 단어를 써가며 강력 비난하고 있음.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1일 “중국의 대응은 얼마나 격렬하든 정당하다”며 “이번 미국의 결정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서 이중기준과 위선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도 자국 정부의 대미(對美) 제재가 “외교 마찰을 다루는 데 다른 강경 조치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단결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경고했음. 중국 네티즌들도 미국의 무기 판매 결정을 비난하면서 항의 연대서명에 가세해 여론몰이에 적극 나서고 있음.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인터넷판과 주요 포털인 서우후(搜狐), 텡쉰(騰訊) 등이 공동으로 시작한 항의 연대서명에는 이들 만에 참가자가 3억 명을 넘어섰음. 네티즌들은 미국의 무기판매 결정을 비난하면서 미국 제품 불매운동을 촉구했으며 심지어 군사행동을 거론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 미국과의 무역마찰에 대해서도 대미 비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음. 중국 상무부는 1일 야오젠(姚堅)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미국이 자국산 시추용 강관 등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이런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양국 무역관계를 위협하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음. 중국은 최근 미국과 갈등을 빚은 구글 사태에 대해서도 여론몰이에 적극 나선 바 있음. 중국 시장에서의 철수 경고로 시작된 ‘구글 사태’가 전개되자 정부 차원의 공세뿐만 아니라 언론과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미국을 비난하고 나선 것임. 인민일보와 중국청년보, 환구시보 등 주요 언론들은 최근 일제히 사설과 논평을 통해 미국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중국을 비방하고 있다고 맞섰음. 다만 구글 사건은 더 큰 사안인 무기 판매로 인한 갈등이 불거진데다 구글이 한발 물러서 중국에 잔류하겠다는 희망을 피력하면서 소강 국면을 맞고 있음.

● “中, 美기업제재 정당하지 않아” <백악관>(종합)(2/2)

- 미국 백악관은 1일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에 관련된 미 기업들에 대한 어떠한 보복도 정당하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무기판매와 관련한 중국의 미 기업 제재위협에 대한 질문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브스 대변인은 미·중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어느 나라도 다른 한쪽을 단순히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우리가 하려는 것이 아님. 누구도 어느 한 쪽이 그렇게(외면) 하리라고 예상치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이번 대만 무기 판매문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 11월 중국 방문 당시 중국인들이 지켜보는 타운홀 미팅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로 중국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했다며 국제경제회복, 핵무기확산 우려 등 상호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 협력하는 관계를 원한다는 점을 항상 말해왔다고 언급했음. 하지만 그는 “견해차가 있을 때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 이라면서 “그것이 우리가 이 행정부에서 가져온 중국과의 관계이며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협력은 하되 할 말은 하는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음. 기브스 대변인은 또 중국의 미 기업 제재 문제 역시 작년 11월에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교류 프로그램 중단을 발표하고 대만 무기판매와 관련된 미 기업에 대해 제재를 시사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의 중대한 국익이 걸린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대만 해협의 안정은 우리에게 중대한 이익이 걸려 있다”면서 “우리는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국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어무기는 대만 해협의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크롤리 차관보는 “중국과 긍정적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익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상호협력이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중국과 여러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둘러싼 미·중 양국의 분쟁이 장기화하지 않고 일시적인 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군사적 교류와 상호전략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통해 안정성이 제고됐다”면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와도 일시적이고 상호 이해를 강화하는 관계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대만에 대한 64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은 이번 미·중 양국의 외교 설전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 군수업체들인 보잉사와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의 대변인들은 모두 정부들 간의 문제라며 중국의 제재 가능성 발표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음.

● “美, 무기판매 中과 협의 않아”(2/1)

-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팔 때 중국과 협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고위 관리가 대만 측에 알려 왔다고 워싱턴 주재 대만 대표 위안젠성(袁健生)이 밝혔다고 대만 신문들이 1일 보도했음. 이에 앞서 제임스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미국시간) 미국의 무기 판매와 관련해 중국과 협의할 것처럼 시사했었음. 아시아 태평양 담당 미 고위 관리인 존스 보좌관 발언 직후 미국은 지금까지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상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상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만 측에 알려왔다고 위안 대표는 전했다.

- 한편 우둔이(吳敦義) 대만 행정원장은 대만 정부가 F-16C/D 전투기와 디젤 잠수함 구매 문제를 미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발표한 대만에 대한 64억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 리스트에 이 2가지가 제외된 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잠수함은 가격이 비싸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대만 자위력 보장 의무 다할 것”(2/1)

- 미국 국방부의 윌리스 그렉슨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일 “미국은 대만의 자위력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그곳(대만)에서 모든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를 방문 중인 그렉슨 차관보는 최근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대(對)대만 무기판매 결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도 계속 대만에 대한 의무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렉슨 차관보는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과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 中언론 “美 대만에 무기판매는 오만”(2/1)

- 중국의 관영언론들은 1일 미국이 대만에 64억달러 규모의 첨단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데 대해 ‘오만’, ‘위선’ 등의 단어를 써가며 강력 비난했음. 중국 언론은 특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회사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중국 외교부의 경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방중 당시 중국을 ‘봉쇄’하지 않겠다고 약속은 거짓이었다고 비판했음.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는 “중국의 대응은 얼마나 격렬하든 정당하다”며 이번 미국의 결정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서 이준기준과 위선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아울러 “워싱턴의 오만한 한 국가의 이익이 다른 국가에 의해 어떻게 짓밟힐 수 있는지, 냉혹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도 자국 정부의 대미(對美) 제재가 “외교 마찰을 다루는 데 다른 강경 조치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단결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경고했음.
- 중국 네티즌들도 미국의 무기판매 결정을 비난하면서 미국 제품 불매운동을 촉구했으며 심지어 군사행동을 거론하는 주장도 나왔음. 허난성(河南省)의 한 남성은 포털사이트 ‘시나닷컴’에 “모든 종류의 미국 물건을 사용하지 말자”면서 “노(no) KFC, 노 맥도날드, 노 미국 여행!”이라고 적었음. 다른 중국 네티즌은 “먼저 연기 없는 전쟁



을 치른 뒤 실제 전쟁을 시작하자”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네티즌은 미국과 세력균형을 위해 이란과 북한에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고자 주장하기도 했음. 글로벌타임스 기사에는 “중국 정부는 국가의 핵심 이익에 대한 모든 위협에 보복할 수 있다”는 댓글이 달렸음. 중국 네티즌들은 이밖에 대만을 비난하는 목소리와 함께 과격한 반응을 자제하지는 의견도 간간이 내놨음.

마. 미·일 관계

● 美 “일본인 납북자문제 안도와준다”(2/7)

- 미국 정부는 일본이 이혼한 부부의 공동양육권을 보장하는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일본 교도통신은 6일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달 초 일본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일본 정부에 국제결혼 후 이혼한 부부에 대한 공동양육권 보장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음. 캠벨 차관보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공동양육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음. 일본 관리들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국민 여론을 고려, 헤이그협약 가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측은 일본의 가입 전망을 확신하지 못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바. 미·러 관계

● 美-러 의회, 4월 새 군축 협정 비준 협의(2/5)

- 미국과 러시아 의회가 오는 4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 비준 문제를 협의한다고 5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음. 미국을 방문 중인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미하일 마르겔로프 외교위원장은 “새 군축 협정 문안 작성이 거의 완성된 것으로 안다”며 “양국 정상이 협정에 서명하면 이제 양국 상원은 협정 비준 임무를 떠안게 된다”고 밝혔음. 마르겔로프 위원장은 “양국 의원들이 4월 12일 미국에서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 이후 워싱턴에서 만나 START-1 후속 협정의 비준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음.
- 지난 연말(12월5일) 마감 시한을 넘긴 양국 군축 협상 대표단은 지난 1일 제네바에서 협상을 재개했는데 검증과 통제 절차 등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사안에 원칙적 합의에 도달, 현재 조약 문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게이 프리호드코 크렘린 대외정책 보좌관도 3일 “양국이 3~4월 중 새 조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해 새 협정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했음. 마르겔로프 위원장은 “양국 의회 협의 과정에서는 새 군축 협정의 비판자들도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음.



- 한편, 러시아 상원은 여당이 절대 의석을 장악하고 있어 새 군축 협정 비준에 별 어려움이 없지만,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새 군축 협정 서명이 이뤄지더라도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 이 협정은 상원에서 67명 이상의 동의, 혹은 참석 의원 $\frac{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비준될 수 있는 데 강력한 핵 억지력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온 공화당의 의석수는 현재 100개 중 41개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정 비준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임.

● “美-러, 전략무기감축협정 원칙적 합의” <WSJ>(2/3)

-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 협상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서 군축 관련 관료 등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START-1 후속 협정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음.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 협상대표인 로즈 고테펠러 국무부 검증·군축 차관보가 1일 스위스 제네바로 이동해, 최종 합의서의 초안을 마련하고 합의 내용을 조약 문구로 바꾸는 작업을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음. 이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주요 이슈들이 잘 해결됐다면서 미세조율 작업이 진행 중인 단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미국 정부 관계자는 후속협정이 최종적인 단계로 접어들 때까지 1주일에서 두 달여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음.
- 러시아의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국가안보회의 서기도 같은 날 인터넷 팩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협상이 “합리적인 결론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3~4월 중에 협상이 조인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음. 이번 협정은 배치된 핵무기 최대한도를 기존 2천 200개에서 1천500~1천675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발사 수단은 700~800개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양국의 최종 합의를 도출할 경우 1991년 START-1 이후 20여년 만에 후속 협정을 내놓는 것임.
- 미국과 러시아는 START-1 후속협정을 지난해 12월5일까지 마련하기로 했지만 마감시한을 넘겨 협상을 지속했음. 양국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START-1 후속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4월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을 추진하는 등 핵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사. 일·러 관계

● 日, 분쟁해역 어선 총격 러시아에 항의(2/1)

-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 영도분쟁을 빚고 있는 홋카이도(北海道) 북방 구나시리도(國後島) 부근 해역에서 러시아 국경경비대가 자국 어선



에 총격을 가한데 대해 항의했음.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구나시리도 해역에서 러시아 국경경비대 헬리콥터가 일본 어선 2척에 총격을 가한데 대해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구두로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음. 러시아 언론은 국경경비대가 일본 어선 2척의 영해 침범을 확인하고 운항을 멈출 것을 요구했으나 무시해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음. 러시아 국경경비대는 당초 어선의 선체 밖을 향해 경고사격 했으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자 선체를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음. 총격을 받은 일본 어선 2척은 선체에 총격 흔적이 있다며 러시아 측에 구조를 요청해 러시아 측이 소형 함정을 파견했으나 함정이 도착하기 전 일본 해역으로 귀환했음.

아. 기타

● <대만, 中 일거수일투족에 촉각>(2/5)

- 대만인들이 중국과의 양안관계가 밀월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중국이 행여 군사행동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대만 연안에서 벌어진 ‘잠수함 파동’과 할리우드 영화 ‘비호군영’飛虎群英에 대한 중국의 개입 우려는 대만인의 이런 불안감을 대변해 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음.
- ‘잠수함 파동’은 대만 해군이 지난달 27일 대만해협에서 대(對)잠수함 작전을 벌이다 S-70C 호크 헬리콥터가 수면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것이 발단이 됐음. 이 첩보는 즉각 해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와 총통부에 보고됐고 중국 잠수함일 가능성을 인식한 지도부는 비상을 걸고 물체확인을 지시했음. 대규모 수색작전을 벌인 결과 괴물체는 화물선에서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였음. 중국의 시사 전문지 세계신문보는 지난 3일 대만의 ‘잠수함 파동’은 근거 없는 것이라는 제목아래 해프닝의 전말을소개했음. 이 신문은 대만 정객들이 이 해프닝을 빌미로 중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두고 지나친 소란을 떨었다고 했으나 상당수 대만인이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짐.
- 우위썬(吳宇森.오우삼.61)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 할리우드 영화 ‘비호군영’에 대해서도 대만 일각에선 우려가 소리가 높음. 대만 언론매체들은 2차대전 때 미군이 국민당 공군과 협력해 일본군에 타격을 가하는 내용의 이 할리우드 영화가 대만 국방부의 협조로 촬영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우위썬 감독이 중국과 협력할 것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임, 이렇게 되면 이 영화에서 대만의 시각은 사라지고 중국 측 입장과 역할이 두드러져 대만은 다시 ‘왕따’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임. 한편 중국의 한 대학생은 대만 학생과 인터넷 채팅을 즐기다 “혹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멸망하면 대



륙의 너의 집에 머물게 해 줄 수 있느냐”는 글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음.

● 러시아, 올해 전승기념일 행사 역대 최대 규모(2/4)

- 러시아 정부가 올해 2차 세계대전 승전 65주년 기념행사를 구소련 붕괴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치를 계획이라고 4일 일간지 코메르산트가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음. 러시아 국방부 알렉세이 쿠즈네초프 대변인은 “이미 5월 9일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면서 “이번 행사는 소비에트가 해체된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쿠즈네초프 대변인은 “이번 행사에는 총 165대의 전투기와 헬기가 동원되며 일부 전투기들은 ‘65’라는 숫자를 붉은 광장 상공에 만들어 낼 예정”이라고 밝혔음. 또 탱크와 장갑차 등 지상 군사 장비들도 과거보다 훨씬 많이 동원되며 행진하는 일부 군인들은 당시 참전 용사들이 사용했던 무기와 군복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부는 이번 행사에 러시아가 자랑하는 Tu-95M 전략 폭격기와 초음속 전투기 Tu-160, 실전 배치 전인 Su-34 전투기, Tu-22M3 장거리 폭격기 등 첨단 전투기들을 총출동시킬 예정임. 국방부는 또 1995년 승전 50주년, 2005년 승전 60주년 행사처럼 이번에도 독립국가연합(CIS) 소속 국가 지도자를 비롯한 각국 정상들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행사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등 53개국 정상들이 참석했음. 한편,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2차 대전을 ‘위대한 조국 전쟁’으로 부르면서 종전 이후 매년 붉은광장에서 탱크, 장갑차, 미사일을 동원한 군사 행진을 벌였음. 구소련 붕괴 이후인 1992년부터는 무기 반입 없이 군인들의 행진만 했고, 붉은광장에 다시 전술·전략 무기가 등장한 것은 2008년부터임. 서방은 이런 군사 행진을 소련 붕괴와 함께 실추된 러시아의 군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선전용’으로 보고 있음.

● 中, 인접 12개국과 국경선 확정 (2/2)

- 중국이 국경을 맞댄 14개 국가중 12개 국가와 국경선 획정을 마쳤다고 신화 통신이 1일 보도했음. 중국 당국은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전국변경·해양방어 업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음. 국가변경·해양방어위원회 판공실은 인도와는 정치지도를 원칙으로 국경선 문제를 해결한다는 조약을 체결했고 남중국해상의 국가들과는 ‘남해 당사국 행위선언’을 맺었으며 일본과는 동중국해 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밝혔음. 라오스와는 올해부터 국경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음. 중국은 한국과도 서해의 섬들과 이어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이 있어 수차례 협상을 해왔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북한과는 일찌감치 국경선 조약을 통해 획정을 마무리 지었음.
- 중국 외교부는 작년 5월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무사(邊界海洋事務司)를 신설하고 주한 중국대사를 지낸



닝푸쿠이(寧賦魁)를 사장(국장)에 임명했음.

● <대만, 中잠수함 출현설..진위공방 가열>(2/1)

- 대만 영해에 중국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출현했다는 보도가 1일로 이틀째 이어지면서 진위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우둔이(吳敦義) 대만 행정원장이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한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부인했고 대만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에 진실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사실이라면 양안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며 압박하고 있음. 중국 잠수함 출현 소식은 31일 오후 연합만보(聯合晚報)에 이어 1일 자유시보가 보도하고 대만 TV와 라디오들이 가세하면서 주요 뉴스로 급부상했음. 자유시보와 연합만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항 궈잉(左營) 해군기지 서남쪽 24해리 대만 영해에서 중국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으며 이 물체는 대만 함정들과 잠수함 추적 헬리콥터들이 추적하자 오후 6시 슬그머니 사라졌음.
- 해군은 당시 탐지한 음파를 미군에 보내 확인할 계획이며 중국 잠수함이면 킬로급일 가능성이 크다고 자유시보는 전했다. 당시 해군은 잠수함 탐지 훈련을 실시 중이었으며 중국은 대만의 잠수함 탐지 능력과 긴급 대응 체제를 파악하기 위해 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24시간 TV 뉴스 채널인 '동삼신문'(東森新聞)은 보도했음.
- 대만 해군사령부는 처음에는 논평을 거부하다가 31일 샤더위(夏德玉) 정전(政戰) 주임이 “해군 훈련 중 해저 물체를 발견했으며 판독 결과 잠수함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어떤 물체인지는 밝히지 못했음. 샤더위 주임은 해저 물체 판독에는 수심, 해저 지형, 침물선박, 어군(魚群)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음. 그러자 제1 야당인 민진당 차이황량(蔡煌瑯) 입법위원은 1일 “만약 정말로 중국 잠수함이라면 양안 화해 정책이 실패했고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이 조금도 줄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국방부는 빨리 분명하고 명백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음. 여당인 국민당 황자오순(黃昭順) 입법위원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로 걱정이 된다”면서 “국방부는 국민에게 사실과 진상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으며 중국 잠수함이 맞다면 양안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해야 한다”고 말했음. 이번 잠수함 출현설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로 올들어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불거진 것임.

● 中전문가들 “中, 추가 군사실험할 듯”(2/1)

- 중국이 천명한 미국과의 군사교류 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며 중국이 추가적인 군사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음.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가인 진찬룽(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지난달 31일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에 “중·미 양국의 군사교류 중



단은 중국의 첫번째 대응에 불과하다”면서 “중국 군부가 추가로 첨단무기 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진 부원장은 “중국은 지난 11일 육상기지에서의 미사일 요격실험에 성공해 중국의 국토방어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및 경고조치로 추가 군사 훈련 또는 실험을 조만간 진행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앞서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를 추진하던 지난 11일 예고 없이 미사일 요격실험을 하고 곧바로 실험 성공 사실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대만에 대해 무력시위에 가까운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

- 앞서 중국 국방부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음. 황쉐핑(黃雪平)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8일 발표한 비난성명에서 “중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대응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을 제기했음.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더욱 강경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관영 중앙(CC)TV의 군사평론가인 송샤오진(宋曉軍)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는 중국이 스스로 존엄성을 수호하는 능력을 증강시키고 실력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면서 “중국은 스스로의 실력을 한 계단 더 높이고 핵심 이익을 더욱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또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린샤오광(林曉光) 중앙당교 연구원은 “중국의 미국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는 첫 걸음이며 미국 역시 이미 예상했던 부분일 것”이라면서 “미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미국의 대응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음. 중국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한 직후 국방부, 외교부, 대만사무관공실 등 각 유관부처가 잇따라 비난성명을 내고 미국과의 군사교류 전면 중단과 무기를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시행 등을 천명했음.



[참고 1] <캠벨 차관보 기자간담회 문답>(연합뉴스, 2/3)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커트 캠벨 미 국무부차관보는 3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2005년(9.19 공동성명)과 2007년(2.13 합의)에 취해진 조치를 북한이 다시 약속하기 전에는 제재 해제나 평화협정과 같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캠벨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 공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고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6자회담의 재개라는 핵심적인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남북정상회담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캠벨 차관보와 일문일답.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우리가 이보다 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정상회담 가능성을 포함한 한국 정부와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에 대한 제안이나 전망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은 6자회담과도 연관돼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체제 논의가 6자회담과 병행할 수 있는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2005년(9.19 공동성명)과 2007년(2.13 합의)에 취해진 조치를 북한이 다시 약속하기 전에는 제재 해제나 평화협정과 같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사고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6자회담의 재개라는 핵심적인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 북한이 일단 6자회담에 복귀하고 다시한번 2005년과 2007년의 입장을 약속한다면 그때 가서는 다양한 사안들에 관해 양자회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관련된 다른 조치들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패키지가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가. 또 한국과의 협의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왔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정치적·경제적·인도주의적·기술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명백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6자회담의 본질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된 사안이며 만약 북한이 인권이나 핵에 대해 진정한 진전을 보인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외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폐기를 포기하고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관해 목표가 무엇인지 일관되게 이야기 해왔다. 핵 능력 폐기와 핵 확산 예방 두 가지 모두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에서는 2012년 4월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현 시점에서는 현재나 미래에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약속이 얼마나 확고한 지를 안심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파트너 국가로서 (전작권 반환에 관한 한국 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 고위 지도자들간 더욱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 군사력과 한국 고위지도자들의 판단에 우리는 커다란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지도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들은 바 있다. 한국의 파트너들의 안보나 자신감을 저해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해외차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긴급사태나 지진, 한반도 바깥에서 한국과 미국이 공통으로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군사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높이는 게 '적절한 유연성'(Modest Flexibility)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적절한 유연성은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실하고 깊은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전략적 억지력과 한반도 안보조치가 확고한 상태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QDR의 다른 부분을 보면 괌이나 한반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나와 있다. 이 역시 한반도의 안정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2] <美, BMD체제 참여제의 논란>(연합뉴스, 2/3)

<그래픽> 한국형 미사일방어(MD) 체계



장성구, 김토일 기자 kmt01@yna.co.kr / 20091020

(서울=연합뉴스) 장성구,김토일 기자 = 우리 군이 2012년까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를 갖추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한 미사일방어(MD) 구축 문제를 한국과 계속 추구하고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미국 국방부가 3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나서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백악관에 제출한 ‘탄도미사일방어’(BMD)계획 검토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 BMD 체제의 중



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미국과 한국은 향후 BMD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 국방부는 “미국은 한미간 작전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현재의 미사일 방어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진일보한 조치들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한국의 BMD체제 참여를 제의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BMD체제 참여를 제의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대응방향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학적인 비용** = 전문가들은 BMD체제를 구축하는데 8조~10조원의 전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BMD체제 구축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진행 중이며, 한국이 참여할 경우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적극적으로 BMD체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본 해상자위대는 작년 10월 미 해군의 협력 아래 하와이 연안에서 중거리 미사일 요격실험을 성공리에 마쳤다.

BMD체제는 조기경보체제와 상층방어요격체제, 하층방어요격체제, 지휘 및 통제체제로 구성된다. 조기경보체제는 우주에서 탄도미사일의 열적외선을 감지하는 정찰위성(SBIRS)과 표적미사일을 탐색, 탐지, 추적하는 X-Band 레이더, 미사일의 궤적을 탐지, 추적하는 지상경보레이더 등으로 이뤄진다. 미국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기존 DSP위성을 5개의 SBIRS로 교체한데 이어 총 24개의 SBIRS를 발사할 계획이며, X-Band 레이더를 알래스카와 한국 등 9개 기지에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층방어체제는 항공기에서 레이저빔을 쏘아 미사일을 격추하는 ABL(공중 레이저발사기),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 전구 고고도 방어체제(THAAD), 해상요격미사일(SM-3) 등으로 구성된다. ABL의 유효사거리는 450km이며, GBI는 160~320km의 상공에서 초속 7.11km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THAAD는 고도 150km에서 초속 2.5km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2005년부터 실전배치됐다. SM-3는 사거리 1천km 이내에서 고도 70~500km 상공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잡을 수 있다.

하층방어체제는 중거리 요격미사일과 SM-2 해상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이뤄진다. 탄도미사일이 50km 이내 상공을 비행할 때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미사일방어체제는 1983년 레이건 전 대통령이 전략방위구상(SDI)을 발표한 이후 추진됐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 때는 BMD 구상으로, 2000년 부시 전 대통령 때는 MD로 용어가 바뀌었다.

◇**한국형 MD체제 구축에 지장** = 한국이 미국의 제의대로 BMD체제 구축에 참여할 경우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MD체제 구축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MD체제는 2012년까지 구축될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패트



리엇 미사일 등이 핵심 요소다. 1천억원 가량의 조기경보레이더는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장비로 2011년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군은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PAC-2) 미사일 48기를 모두 도입한 뒤 이보다 성능이 개량된 PAC-3를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대 사거리가 160km에 이르는 KN-01과 KN-02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스킨드(사정 300~500km), 노동(사정 1천km), 대포동 2호(4천 300~6천km) 미사일의 발사 움직임을 조기경보레이더로 탐지하고 실제 발사됐을 때 PAC-2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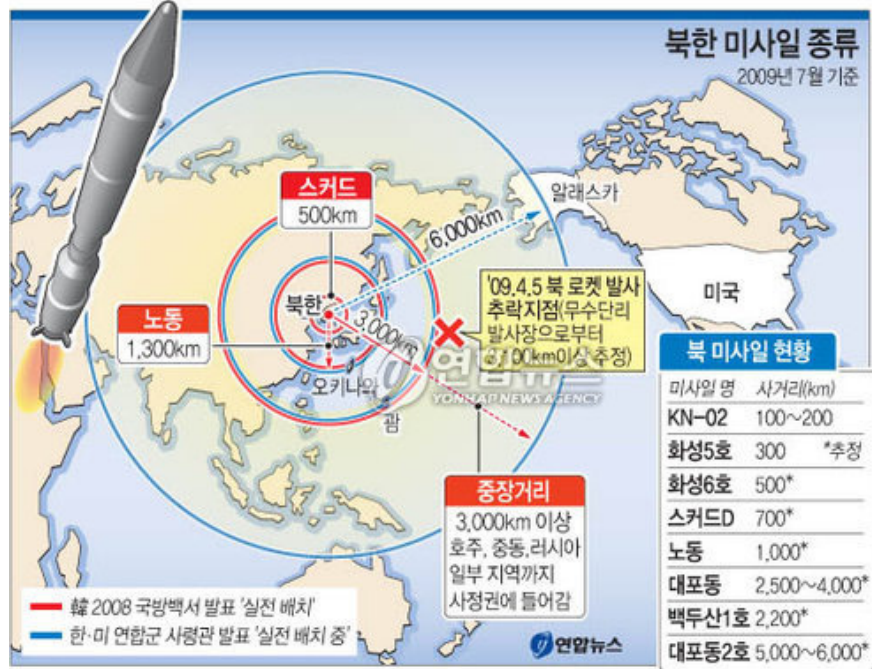
또 2011년까지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일명 '철매-Ⅱ')의 성능을 개량해 탄도탄 요격 미사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미사일 동향은 기본적으로 조기경보레이더를 통해 탐지되지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대가 도입되는 공중조기경보기(AEWS:일명 피스 아이)와 이지스 구축함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해 AMD-Cell로 보내게 된다. 한국이 미국의 BMD체제에 참여를 결정하면 탄도탄 방어체계사업의 중복 투자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신중한 반응** = 국방부는 미국의 BMD체제 참여 제의에 대해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으며, 미국 정부가 한국에 BMD 체제 참여를 공식 희망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MD 참여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는 위협의 사전 탐지 및 방어태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 MD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 3] <美QDR, 주한미군 차출.北미사일 위협적시>(연합뉴스, 2/2)



반종빈 기자 bjb@yna.co.kr / 20100202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향후 10년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미국 국방부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해외차출 가능성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4년 주기로 발행되는 QDR은 앞으로 4년간 미국의 방위목표와 전략, 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 전력 소요를 담아 의회에 제출한 정책검토 보고서라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차출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방안이 조만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 주한미군 해외차출 =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은 ‘전진배치’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주둔’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주한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전 세계의 우발사태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는 ‘군병력의 풀(pool)’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병들이 1년 근무기한 단위로 순환배치되는 주한미군의 근무 환경이 앞으로 근무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장기 주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개념이 정착되면 해외 차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국방부는 작년 여름부터 핵심 주요 보직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가족을 동반해 근무토록 해서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될 때까지 3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록 조치하고 있다.

작년 가족을 동반한 장병이 2천135명에서 4천350명으로 늘어났으며, 장기적으로 1만4천250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한미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점차 가시화하는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 문제에 대해 한미는 이미 실무적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내에는 어느 정도 입장이 조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주한미군의 복무 정상화(1년→3년 연장)는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사안이고, 우발사태 지역으로 차출 문제는 복무 정상화와 연계한 하나의 장점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뤄질 사안”이라면서도 “이들 문제에 대해 미국이 정책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실무선에서도 실무적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유사시 주한미군의 차출 규모와 해외 활동시한을 비롯한 차출 시 병력 대체 또는 대체 전력 투입 등의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500~1천 여명의 병력을 해외로 차출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한국으로 그만큼 병력을 투입할지 아니면 병력이 아닌 전투기와 무인항공기(UAV) 등 보완전력을 제공할지 등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해외 차출 문제는 오는 6월 예상되는 양국 국방·외교장관 4명이 참석하는 ‘2+2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 QDR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을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보유 국가로 명기한 것이 특징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기지에서 1만km~1만2천km에 이르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2호) 개발 능력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QDR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는 QDR 보고서 발행에 맞춰 공개한 ‘탄도미사일 방어계획 검토보고서’에서 이런 ICBM 능력을 상세히 다뤘다. 이 보고서에 드러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그간 한·미간 공유해온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보고서는 “지난 2006년과 2009년 대포동 2호 실험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북한이 조만간 대포동 2호 미사일 실험을 성공할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만약 북한이 향후 10년내 자신들의 국가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성능이 입증된 미사일 시스템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10년 내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이를 ICBM에 탑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성능이 개선된 고체추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개발했고,



이동용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사거리 120km의 KN-02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거리를 늘린 KN-06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지난 2007년에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는 사거리 3천km 이상의 IRBM을 실전 배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그간 알려진 북한의 ICBM 개발능력과 SRBM, IRBM을 공개 보고서에 재차 적시해 부각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 당위성과 이에 한국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